제337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2015년10월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1

(10시07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0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질문을 실시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질문시간은 오늘은 답변을 제외하고 15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여수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사랑하는 국민과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9대 국회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각종 의원외교 활동을 정리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통일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행정부를 성심껏 이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제 질의가 다소 강의 형식이 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국무총리 정도 되시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보고 국정을 이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면서 큰 그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혹시 문명사 연구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

비라는 역사학자 이름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들어 봤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분께서 새로운 문명은 문명과 문명이 교차 충돌하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하면서 21세기 지구촌을 리드할 새로운 문명의 후보지로 동북아시아를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동양문명과 서양문명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충돌의 한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의 분단이 지금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좌우 양극의 문명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대안문명이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남북통일은 단지 한민족의 통일이 아니고 인류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성곤 의원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우리 태극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다 아시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처럼 우주의 원리를 국기로 형상화한 나라가 없어요. 이 태극기 가운데 음과 양을 나타내는 태극이 있고 그리고 좌우 4개의 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춘하추동 등을 나타내지요.

우리 총리께서는 이 태극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단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이런 이념과 이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의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한 B학점 드려야 되겠네요.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음양 상승, 조화 균형 이게 사실은 우리 태극기에 담긴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부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저는 우리 대통령과 또 공직자들이 태극기의 정신으로 우리 국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우리의 남북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을 이 태극기 원리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주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 북한은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1990년대까지 소련과 중공에 그 안보를 의존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북방 삼각구도와 남방 삼각구도가 부딪치는 냉전시대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외교의 비결은 이 태극기를 한번 거꾸로 돌려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태극 위쪽 파란색이 북한이고 아래쪽 빨간색이 남한이에요. 남남북녀라고도 하지만 북이 음이고 남이 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색깔을 지난번에 빨간색으로 바꾼 것은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그리고 좌측에 소련과 중공, 공산권, 큰 음의 세력이 있고 우측에 일본과 미국, 자본주의 국가를 말하는 큰 양의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냉전시대 우리 한반도의 구도입니다.

이 북방 삼각구도와 남방 삼각구도가 한반도에서 40여 년을 팽팽히 맞서고 있다가 1990년 전후해서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동북아시아에 큰 변화가 옵니다. 즉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이지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어서 인류의 역사는 다 이 우주 기운의 큰 흐름 속에 저는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의 붕괴, 중공의 개방, 남북한의 관계 개선도 다 이런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1989년에 베를린의 동서 장벽 붕괴, 그리고 1990년 한국과 소련 수교, 또 그리고 91년 소련 공산당 붕괴, 그리고 92년 한중 수교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태극기에 비유하자면 좌측의 음의 기운, 즉 소련과 중국이 남한을 향해서 크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6·25 때 전쟁까지 치른 적국인데 이제 우리와 친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음양 상승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제 논리가 그럴듯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음양의 원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총리가 법학만 하셨지 철학을 안 하셨네요.

음양 상승의 원리는 이 우주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오늘 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림과 같이 큰 음의 세력이 양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큰 양의 세력이 음으로 움직일 차례예요. 다시 말해서 소련과 중공이 우리 남한 쪽을 향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음양 상승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소련과 중국은 남한과 지난 25년간 엄청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뭐 원인은 여러 개이겠지만 돌아야 할 음과 양의 기운이 돌지 않으니까 이 지역이 병이 드는 겁니다.

총리, 우리 몸에도 음양 기운이 막히면 병들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그 부분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김성곤 의원 아니, 음양 상승의 기운은 우주 만물에 다 통용이 된다니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의원 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생긴 병이 북쪽은 북핵병이고 남쪽은 좌우갈등병입니다. 만날 싸우잖아요.

북이 핵 무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1990년대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북한을 지원했던 소련과 중국이 남한과 돌연 수교를 하고 심지어 새로 태어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동맹관계마저 끊어 버립니다.

반면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버티고 있고 매년 한미합동 군사훈련까지 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북한은 안보에 불안을 느끼겠지요.

저는 북한 핵 무장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이 국제적 고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의견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립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그 외에……

○김성곤 의원 원인은 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먼 원인이 되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어쨌든 당시에 북한이 고립된 건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병은 그 원인을 치료해야지 완치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껏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북핵 그 현상만 자꾸 없애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가 어느 정도 합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온 2008년부터 이것이 파투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 6자회담은 전혀 진전이 없고 북핵은 점점 견고해져만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다, 드레스덴선언이다 여러 가지 화려한 말은 있었지만 아무 결실을 갖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북핵 때문이고, 이 북핵이 해결 안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북핵 자체만 자꾸 포기시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세계 공영의 무대로 나가지 못하고 외려 고립되어 있는 채로 무기에, 특히 핵무기에, 거기에 국가의 안전을 걸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안보상의 세력들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핵으로 무장해서 막겠다고 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성곤 의원 그런데 왜 북이 핵 무장을 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핑퐁이 되는데, 좀 들어 보세요.

이번에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존경하는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나오지요.

러시아 최고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친북 인사가 아니고 오히려 친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조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바노프 전 외교장관 '러시아도 북한 핵개발에는 반대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원장 '북한의 핵개발 배경에는 대미 안보 불안이 있으므로 미·북 간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이바센초프 전 주한대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봉쇄가 아닌 포용, 무력 불사용, 불위협 정책을 써야 한다', 또 수히닌 국제관계대학 교수 '한국이 미·러·중·일 5자의 힘을 모아 북한을 압박하려 하는데 그래서는 북핵 문제 해결 안 된다'……

의장님, 안 계신가요?

맞지요, 제 말? 같이 들었는데.

○의장 정의화 듣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저는 이러한 러시아의 충고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총리께서?

○국무총리 황교안 관전자의 입장에서, 물론 친한인사라 하더라도 관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또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괜찮다. 우리가 용인하겠다' '관용의 정치로 당신을 품겠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김성곤 의원 그런데 관전자는 4강이 다 똑같은데 왜 우리는 주로 미국 쪽 얘기만 듣고, 중국이나 이 소련 쪽 얘기는 상당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누구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성곤 의원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자주적으로.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판단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안보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을,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그래요, 저도 거기는 동의해요.

마침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이수용 북한외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2006년 부시 전 대통령도 종전협정에 응했으며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이명박 정권 이후 지금까지 중단되고,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정권에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튼튼한 안보의 전제하에서 남북 간에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되는 이런 안보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사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 북한과의 대화 또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일, 두 가지 지금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의원 제가 안보를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관계…… 평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또 안보도 그만큼 우리가 부담을 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같이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균형외교의 시작을 저는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박 대통령께서 통일외교를 말씀하시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 미국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통일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 북핵에 대해 5자가 공조 강화를 통해 공동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정부가 4강의 지원을 받아 북을 압박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북이 반발했습니다.

저는 이 6자회담도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런 압박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6자회담의 신랑 신부가 우리 남북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같이 합니다마는 중요한 역할을 두 축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러면 신랑이 신부될 여자의 마음을 먼저 사야지 지금 박 대통령 통일외교를 보면 주위의 중매쟁이들 설득해서 신부를 강제로 데려오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 갖고 결혼이 되겠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계속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설득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자꾸 압박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4강 균형외교를 박 대통령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동안의 미국 위주의 1강 외교는 냉전시대의 산물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냉전이 끝난 지 4반세기가 된 만큼 우리의 통일외교도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군사안보적 시각에서만 접근하면 결국 우리는 미국에 더 의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따라 일본에게도 의존하게 되는 궁색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외교가 좀 더 당당한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1강 외교에서 4강 균형외교로 접근해서 북한의 안보를 4강이 함께 보장해 주는 쪽으로 풀어야 되고 이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6자회담 당사국들을 포함해서 4강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 동등하게 우리가 같이 안보를 논의해 가야 된다 하는 점에 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김성곤 의원 그러니까 미국이 더 중요하다?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와의 동맹관계가 공고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또 협의가 필요하고 또 다른 3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대중, 대러, 충분한 협의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의원 총리,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면 이 4강과 다 똑같이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도 4강과 잘 지내야 됩니다.

○김성곤 의원 잘 지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김성곤 의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말, 참 얘기하기 껄끄럽습니다마는 익명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 외교관으로부터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경제협력과 대북압박에 이용하려고만 하지 진정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것 우리 정부가 잘 새겨들어야 될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우리 안보를 협의해 나가고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간다 하는 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의원 우리가 남북 통일하면 결국 이 통일된 코리아는 4강과 다 똑같이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가 늘 미국 쪽에만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4강과 함께 공동번영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방이라든지 대외안보 문제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으로? 그 부분을 무시하면서 또는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성곤 의원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의 과정에서 4강의 혜택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북한도 누리게 하는 것이 음양 상승의 법칙에 맞는 거예요. 아까 태극기의 정신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은 북과의 관계개선에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상호 불신 때문이지요. 결국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재해서 미일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지 6자회담도 성공할 텐데, 내일모레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결국은 한미가 합동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마침 이번 북한 전승절 행사에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핵에 대한 언급도 안 하는 등

무언가 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하시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시고 2008년 이후 중단된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관계 모색을 해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성곤 의원 평화체제로의 이전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체제 전환의 문제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과도 협의가 필요하고 우방 국가들도 협의가 필요하고……

○김성곤 의원 이미 2005년 6자회담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평화체제로 간다고.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지난 7~8년 동안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됐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6자회담이 진전이 안 되는 겁니까? 한번 반성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협의와 실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가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는 더 충분한 검토, 다짐이 필요합니다.

○김성곤 의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 태극기 원리에 따라 음양 상승의 통일외교를 해야 우리 한민족이 남도 북도 모두 흥할 텐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는 이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요구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받고 하는 이런 공조라고 그럴까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청을 만드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우리 조직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성곤 의원 어쨌든 지금 여야가 같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가면 재외동포들이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제주도 표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 제주도까지 가서 일을 봅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갈 행정기구를 다른 것을 좀 대신 해 주고 재외동포재단은 인천이나 서울 사이에 이렇게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문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문제 때문에 혁신도시 이전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에 이 청의 배치 문제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말씀,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되고 또 지역적인 갈등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협의해 가면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제 얘기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는 겁니다.

어쨌든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통령께 제가 얘기한 이 태극기 원리 좀 얘기하세요. 안 되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기는 음양의 조화와 상생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통일외교가 이 태극기의 정신을, 4강 균형외교로 나아가 남북 문제와 또 북핵 문제 그리고 6자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군 시조의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뜻이기도 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의를 마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20대 국회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의원님들 섭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북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지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서는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고 그간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 복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이어 어젯밤 미국으로 출국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박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출국해서 오늘부터 방미 공식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심윤조 의원 박 대통령의 지난번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에 미국 내의 조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의 대중 경사론을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나 구체적인 조치가 이번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정치·안보·경제 동맹을 넘어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변국들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도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심윤조 의원 예, 좋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포함한 북한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번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이제 자세한 협상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반도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 또 동북아 문제 또 글로벌 이슈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윤조 의원 지난 9월 25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 조치에 합의하겠다 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외교부가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윤조 의원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군사적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 문제와 또 군사적 대치 이런 데 자위적인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그렇게 미국의 대북 무력위협을 북한은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는 대남 무력위협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생각합니다.

○심윤조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통상전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함으로써 비대칭적 전력의 균형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결국에 그 핵무기를 등에 업고 대남 무력도발 위협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또 북한이 얘기하는 안보 위협 해소론,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줘야 된다는 일부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 의도라든지 비적대 의도(no hostile intent)라고 하지요, 그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 안보 태세도 어디까지나 방어적이고 공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저의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저희의 진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공격적인 전쟁을 해 본 일이 없고 잘 아시다시피 1950년에 있었던 전쟁도 북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 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확고하고 분명한데, 이 부분을 자꾸 북한에서 왜곡해서 남북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윤조 의원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라는 그 저의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하는 그 논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북한의 그러한 선전책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군 철수를 아주 정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며 전략을 구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한 체제로 굳어져 가고, 그러나 그것이 전쟁의 체제가 아니라 평화의 체제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북한에도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윤조 의원 그러니까 남북 간 교류와 협력 그리고 관계 개선, 그 근본에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평화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해서 남북 간 대화를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심윤조 의원 다음에 최근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망라되어 있고, 특히 일본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간 우리가 참여의 적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또 우리만 소외되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전부터 그런 말씀들을 쭉 했습니다마는 저희 당국에서는 TPP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또 TPP에 참여한 당사국들과 개별 FTA를 체결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면밀하게 이 상황을 점검하고 해 왔습니다.

○심윤조 의원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 검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만약에 TPP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 발효 10년 후에 실질적인 GDP가 0.1, 2%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TPP에 대해서 관심 표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협상 동향을 살펴 가면서 참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윤조 의원 메가 FTA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을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 무역 강국으로서 TPP에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제반 문제점을 검토는 하되 관계국과의 교섭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TPP가 타결되면서 또한 한중 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은 인구 13억 5000만 명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한중 FTA는 중국의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이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EU를 합친 수출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에도 한중 FTA는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하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국내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에 10년간 실질 GDP 1% 추가 성장, 연평균 90억 불 무역 증가 그리고 일자리 약 5만 4000개—이것은 정부 발표네요—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러한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면밀한 검토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중 FTA가 발효가 되면 제조업—석유화학이나 전자 등을 말합니다—분야에서 3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5만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일자리가 창출되는군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심윤조 의원 그리고 올해 안에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내 발효할 경우 그리고 내년으로 발효가 넘어갈 경우에 커다란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가장 큰 문제는 관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즉시 발효가 되면 금년에 즉시 관세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내년 1월 추가 관세협의에 있어서 또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윤조 의원 또한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사과, 조기, 갈치 등 우리 핵심 농수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보호했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아직 걱정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피해보전 대책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어떤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피해 산업이 대개는 농수산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피해 산업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대책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그간 FTA가 체결될 때마다 정부에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왔지요?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종합적으로 지금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영향분석평가는 있습니다.

그 영향분석평가에 의하면 우리 피해 업종들, 농어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추가 보전을 위한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수산업의 피해도 나름대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거에 FTA 체결할 때 해 줬던 피해보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농·축·수산가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만큼 피해가 보전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벽을 쳐 놨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라든지 또 득실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제가 한번 부처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조 의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는 하겠으나 그것이 주먹구구 식이나 포퓰리즘에 흐르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편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화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섬유·의류 중소기업 4곳 중 하나는 경영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섬유, 생활용품 등 일부 노동집약적인 그런 제조업 분야는 중국 상품의 수입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취약산업 분야에 대해서 융자 지원과 선제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심윤조 의원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피해보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간의 피해보전 대책의 효

과, 그리고 이번 한중 FTA를 비롯한 5개의 FTA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그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야정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이미 시행한 영향평가와 함께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국회와 또 국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윤조 의원 또 한중 FTA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북한의 도발 저지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 등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FTA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의 경제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조 의원 다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3년 3월에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했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여태까지 해 온 인권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입니다.

즉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ICC지요, 거기에 회부를 권고하는 그러한 강력한 내용입니다.

또한 유엔안보리에서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여태까지 유엔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짐바브웨, 미얀마,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개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보고서에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국회도 여야 간에 지난 10년 넘게 통과시키지 못한 북한인권법을 그간 심도 있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조치와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 비난공세를 지속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지난 9월 중순이지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북한인권행사장에 북한 외교관들이 나타나서 행사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또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를 이유로 해서 외통위가 국정감사를 개성공단에 현장국감을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

○심윤조 의원 북한이 북한인권법 문제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이 외국에 알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가 북한정권의 존립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심윤조 의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국회 외통위에서 개성공단을 현장국감 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거부한 이유가 국회의 인권법 제정 논의입니다. 인권법 제정 논의를 빌미로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측에 대해서 그때 거부했을 때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러한 유감표명 조치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유감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윤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 공개적인

유감표명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남북관계를 우려해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유감표명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이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심윤조 의원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저는 그것은 보다 더 큰 가치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의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상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윤조 의원 우리가 대북지원도 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하더라도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고 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할 때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심윤조 의원 독일 경우를 보면요, 1961년에 동독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폭력행위 억제를 위해서 잘츠기터에 중앙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여기에는 총 4만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수집되었어요. 그러나 통일 이후에 판결을 한 것은 7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많은 기록을 사실 덮은 것이지요.

그러나 동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서독이 증거 수집과 보존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역할 때문에 동독 관계자들에게 경각심과 부담을 주어서 동독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영향을 크게 줬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일례로 동독 경찰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다 잡힌 사람들을 조사할 때 추후에 서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서독 측에다가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기록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그런데 아직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정식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인권 관련 기록들을 보존 또는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부는 어떻게 이런 기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필요한 기관에서 지금까지 조사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정부도, 총리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인 한 공통적으로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한인권법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을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북한 주민이 인권 유린을 당할 때 남한의 동포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고 물을 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19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강창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리고 역사 진실과 정의,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하여 청춘을 불살랐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역사교수 출신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국내 갈등과 분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론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생뚱맞게 42년 전 유신 독재시절에 있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와 구태의연한 이념논쟁을 일삼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책략입니까?

역사바로세우기는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비례하면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차근차근 시작되어 이제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책동을 보면서 야당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역사학도로서 어안이 벙벙하고 동시대에 이렇게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릴 수도 있구나 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요체는 통제와 획일화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와 다양성입니다. 이제 정쟁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나아갑시다. 과거의 잘못인 친일 매국 그리고 독재,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음모에서 나왔다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줄곧 우리는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에 앞장선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학도로서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풀이정치, 오기정치 그만두고 미래를 위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정치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에 90세 고령인 세계적인 재일동포 작가 김석범 선생이 내일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화산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 했는데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88년 이후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하였고 금년도 4월에는 제주4·3평화상을 받기 위해 고국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거부되었습니다.

유신 독재시절,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사건이 어떻게 성숙한 자유민주시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심하고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정을 많이 숙지하셨구먼요. 거침없이 잘 하시는구먼. 국정을 잘 숙지했다고……

○국무총리 황교안 계속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밤샘하도록 공부도 하고…… 그래요. 잘 하고 계세요.

지금 미·일·중 패권경쟁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중국의 궐기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아시아는 패권경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북한 북핵 문제, 통일 문제가 상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난국입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임기응변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집단적 자위권, 신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끌어들여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추종 내지 대리인으로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미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대아시아 전략, 대미·대중국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중국과의 FTA 체결 문제로 미국 주도의 TPP에는 신경을 쓰지 못해서 실기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 사드 배치 문제, TPP 가입 여부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대미·대중국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큰 밑그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동반자 관계를 더 공고히 해 가는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 나간다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부분에 관해서도 어디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국익을 기본으로 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아니, 그 말씀은 아주 초보적인 얘기이고.

자, 단도직입적으로, 사드 문제 어떻게 할 것이고 TPP 문제 어찌할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상의의 계기가 되면 그때 상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지금 TPP는 실기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것……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창일 의원 TPP는 실기했다고, 요즘 신문 안 보세요? 실기했다고 하고 있다고.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강창일 의원 그게 아직도 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에서는 TPP 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그동안 계속 주시해 오고 있었고……

○강창일 의원 아직도 계속 주시? 앞으로도? 참 한심하구먼요. 앞으로 계속 주시만 할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시하면서 필요한 관계국들과, 지금 전부 한 십여 개 곳들과 우리가 FTA를 체결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면서 TPP 문제가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상황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가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나, 총리님 쭉 질의 답변하는 것 보고 들으면 말이지요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짜증 납니다. 짜증이 나요. 이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확하게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TPP 실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부의 입장이 계속 주시·주목하고 국민과 의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얘기해서 되게 짜증이 난다고요, 이 답변 듣는 사람이.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말씀을 제가 듣기 거북합니다.

○강창일 의원 듣기 거북하기는! 지금 TPP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아주 그런 얘기를 계속 일삼고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말씀을……

○강창일 의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너무 듣기 거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사드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는 어찌할 생각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협의를 할 단계가 되면 충분하게 우리 국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그러나 협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일 의원 답변이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올 것 알고 있었어요. 줄타기 외교 하면서 어정쩡하게 지나다가 양측, 미국 중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국제 미아가 되지 마세요. 좀 잘 해 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창일 의원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성이 계시니까 충분하게 좀 조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강창일 의원 우리야 나라를 위한 거면 다 협력하지요, 저희들이. 좀 협력받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입장도, 저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 달라고 해서 큰 기대를 했는데 전혀 큰 그림이 안 나와요. 미국 관계 어떻게 할까, 중국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전략이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얘기 하면 아무 질의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됐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인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일 의원 지금 그 답변은 총리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더 깊은……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말씀……

○강창일 의원 더 깊은 얘기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답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강창일 의원 거북하지요. 거북하라고 얘기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입니다. 여기 국회고……

○강창일 의원 총리, 총리답게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좀……

○강창일 의원 사람 점잖게 얘기하는데……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말씀을 제가 좀 듣기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강창일 의원 총리답게,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얘기해야지 뭐 그렇게……

(장내 소란)

누구야? 뭐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요, 나가! 점잖지 못하게.

누구야, 저것? 한기호 의원인가?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얘기하겠어요.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환영하고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벌어지는 경우에 전시작전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국익에 합당한 이런 결정을 할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충분하게 상의하지 않고 그런 국제관계에 관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협의해 오고 있고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지금 그 전의 정부 입장보다 되게 후퇴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전혀 출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총리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께서는……

○강창일 의원 미국이 요청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도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하겠다 이 얘기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질문이 아까 사드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강창일 의원 집단자위권 얘기……

○국무총리 황교안 집단자위권 얘기를 하셨는데 집단자위권이 행사가 될 때는 당연히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요청이나.

○강창일 의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신안보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전수방위 운운했는데 지금 뭐 사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동의해야만 출병이 가능하다라고 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당연합니다.

○강창일 의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한국에 일본 거류민이 3만 7000명이 있어요, 한국에. 제가 수치를 '얼마 있습니까?' 하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3만 7000명 얘기해 드렸어요. 3만 7000명 정도 거류하고 있는데 혹시 유사시에 그 거류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 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강창일 의원 필요성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

○국무총리 황교안 다른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일 의원 그러면,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필요하면……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가 판단해서……

○강창일 의원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국무총리 황교안 예,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창일 의원 아주 중차대한 발언 하셨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의가 있었을 때 가능하다' 하고 저는 여쭤 본 것이 우리의 동

의 문제인데……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동의가……

○강창일 의원 조금 한국말이 좀 다르지요. 뭐 좋습니다. 뭐 비슷하다고 하니까 비슷하게 받아들이지요.

그게 무슨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 맺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의 동의하에 일본은 진출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 일본하고 무슨 구두약속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조약이나 협정을 맺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조약이나 협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또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구두약속이나 포괄적인 논의보다 더 강한 게 법이지요? 변호사 출신이지요? 법이지요? 협정이나 조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협정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창일 의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렸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일 의원 그렇게 자꾸…… 보장을 받았다? 그건 구두약속이란 얘기인데 아니, 국가 간에 구두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다른 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일본과의 직접적인 협의도 있었고 또 미국과 함께한 삼자협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논의가 있었고……

○강창일 의원 지금 그래서……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들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강창일 의원 잘 모르셔서 이래.

윤병세 장관이 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 나가서 한 번도 마주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참 갑갑하군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1894년 동학농민전쟁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 거류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 해 가지고 일본군이, 명분이 뭔지 압니까? '일본 거류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인천과 부산에 일본군이 진출했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청일전쟁을 도발해서 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도 구두약속 이 정도가 아니라 제물포조약, 천진조약을 내세워서 그걸 악용해 가지고 진출했던 거예요. 그러면 국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구두로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강력한 국제법을 가지고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말로……

지난번에 윤병세 장관이 미국을 가서 기시다 외무부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의 요청이 있었을 때,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피했지요? 아시겠어요? 외무부장관이 그때 피했어요. 그리고 외무부장관 있으면 그때 무슨 얘기 나눴느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나와서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안 되는구먼요, 총리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얘기하신 속기록 잘 보세요. 한국 정부의 입장하고 전혀 다르진 않고, 아주 다른 방향으로 발언을 했어요. 일본군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다, 협의를 거쳐서,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려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강창일 의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분명히 드렸고……

○강창일 의원 안 드렸어요. 속기록을 잘 보시라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분명한 경우에……

○강창일 의원 자기 입으로 얘기해 놓고 기억도 못 해요? 10분 전에 얘기한 건데.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입국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서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그런 경우에……

○강창일 의원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창일 의원 전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주권 침해 안 된다,

우리의 동의하에밖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입니다.

○강창일 의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오해를 한다니까, 국민들이.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안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강창일 의원 그 얘기를 안 해서 내가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속기록 잘 보세요. 예?

그다음에……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강창일 의원 속기록 잘 보시고,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속기록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얘기할게요. 독도영유권 문제 얘기할게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말이지요.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게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그런데 지금 독도입도지원센터도 손 놔 버리고 예산도 그냥 반으로 줄고, 정부는 이제 오히려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비쳐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일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강창일 의원 그러면 입도지원센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해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아마 지금……

○강창일 의원 독도입도지원센터 이게 영유권 강화사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왜 하지 않습니까? 왜 스톱시켰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재작년부터 이 문제 줄곧 질의해서 해수부에서는 하겠다 하고 여기에서는 우물우물해서 지금 스톱되어 있어요. 이게 1·2년 문제가 아니에요, 2·3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지금도 올 스톱 돼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 지금 독도의 지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7년이 됐는데 지금 용역 줘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뭡니까, 지금? 그리고 생태계 조사 이제 다 끝났어요, 2008년도·9년도에. 지금 와서 시간 끌기밖에 안 되고 일본 눈치 보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금년 말에 그 용역 조사가 끝날 거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창일 의원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본격 추진하겠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기본적으로 독도영유권 관리, 독도의 영토관리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한 2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의 정책으로서 공고하게 지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20여 개 자질구레한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3대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3대 지원사업 뭡니까?

잘 모르지요? 됐어요, 됐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모르는 걸 지금 어찌하란 말이에요? 시간 끌라고……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제가……

○강창일 의원 3대 지원센터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아마 독도입도지원센터하고 해양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창일 의원 그리고 방파제 설치 문제.

○국무총리 황교안 예, 방파제하고.

○강창일 의원 아까 자질구레한 20여 개는 돼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스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추진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강창일 의원 들어가세요. 시간 됐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다 됐네, 답변이 안 돼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권력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를 자의적으로 서술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사실을 전제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국가도 잘할 수도 있고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과 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은 전부 공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균형적 역사인식을 위해 공과 함께 과도 씁니다. 이것을 만일에 진보사관이라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과를 썼을 때 미래는 더욱 발전하고 진보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은 야당과 비판자를 적대시, 무시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갖고 있는 권력의 안위에만 급급한 정권이 돼 버렸습니다. 불통·먹통·깡통, 3통의 정권이며 사이비 독재정권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성토하기에는 말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정치를 잘못했을 때 제일 피해 입는 것은 국민입니다.

저희들 반사이익을……

○부의장 정갑윤 강창일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강창일 의원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잘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의원 서울 서대문구을 출신 정두언 의원입니다.

총리 모시겠습니다.

총리, 수고 많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정두언 의원 취임하신 지 이제 꽤 됐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좀 됐습니다.

○정두언 의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는 일 없이 세월만 갔다' 그러는데 제가 총리실 오래 있어 보니까 아는데요, 각종 정부 행사 다니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역대 총리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분 뭐 했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심지어는 총리가 누구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총리께 대정부질문이 아니고 국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첫째, 가뭄 대책인데요.

지금 가뭄 대책이라기보다는 '물 안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심각해진 물 부족 사태입니다. 최근 3년 연속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요, '마른장마'라는 새로운 기상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수 있는 '메가 가뭄'이라는 현상이라고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총리님 아시지만 옛날에 사과가 대구 사과가 상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양구 사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경계로 해서 중부 이북은 지금 심각한 물 부족 지대가 돼 버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많습니다마는 금년 9월 말까지 서울지역 강수량이 577㎜, 그러니까 예년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북부 식수원인 보령댐이 있는데요, 저수율이 22.3%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녹조류도 대량으로 발생해서 수질악화 사태도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1억t 미만의 환경댐을 건설하고 또 지하댐을 건설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수를 재처리하는 걸 확대해야 되고 또 빗물 이용도 확대해야 됩니다. 또 해수담수화 이런 수자원 다변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강과 낙동강·금강 수계를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을 통해서 수자원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네 번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금강산에 임남댐을 북한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설해 가지고 지금 한강수계의 수자원이 1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 안 해도 지금 물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뭄이 심각해지면 그 임남댐을 방류를 좀 시켜서 우리가 수자원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 주고 또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해 주는 그런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북 모두가 윈윈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쉬운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뭄이 지금 큰 위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물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우리가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뭄대책법 마련이 긴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 어디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총리께서 이 문제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히 중서부의 가뭄 사태가 심각해서 최근에 우리 국조실 중심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수자원에 대한 중장기를 포함해서 단기대책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기존의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또 대체수자원 개발 문제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까지도 아마 가뭄이 예상된다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 금년 대책이 아니라 내년까지의 대책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 방안으로 같이 편입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 정리가 된다면 총리께서 대국민담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안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급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마다 국방 개혁을 얘기해 왔거든요. 그 얘기는 곧 국방 개혁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이 정부도 지금 창조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국방 개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모름지기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건데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놓고 그 안에서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국방위원장을 맡고 보니까요, 더욱 분명해지더라고요.

총리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난 국방부 국감 때 일인데요. 증인들이 죽 있는데 증인들이 다 간부들하고 산하기관장들입니다. 모두 4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인이 10명이고요, 나머지가 군 출신인데요, 33명. 33명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3사관학교 1명, 간호사관학교 1명, 해군사관학교가 1명이고 나머지 30명이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지요. 또 육사본입니다. 이게 우리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거기서 창조 국방을 담당한 사람은 육사 출신 준장입니다. 그 사람이 기득권 구조를 깨면서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방 개혁을 하려면 그 선결 조건이 바로 문민 국방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군인 출신 장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위 선진국가의 국방부장관은 전부 다 문민 출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해 놓고요.

사실 군 출신 국방부장관은 촌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군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민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인사를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기본 기조로 인사를 하는 것이 맞

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이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군인 출신은 안 된다 이렇게 만약 제한된다면 그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두언 의원 총리님은 제 질의의 취지를 아시면서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지, 답변은 매끈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총리님 아마 사석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긍정은 안 하시겠지만.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 해야지 그게 소신 있는 총리입니다. 그게 책임총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매끈하게 넘어가면 그게 무슨 총리예요? 그게 의전총리고 대독총리지요.

하여간 제가 총리님 답변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제 취지가 그것 아닌지 알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직은 출신이나 신분보다도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정두언 의원 제 질의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질의가 겨우 그 정도 수준이겠어요? 총리님이 저를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상한 것이지요.

하여간 군인 출신이 국방부장관인 나라는 굉장히 촌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정도 나라가.

총리님, 다음에는 말썽이 많은 방사청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방위산업 비리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방위원들의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방위사업청을 이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손을 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단순합니다. 방위사업 업무를 다시 국방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방부·방사청 각 군의 상호관계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수직관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역할과 책임 분담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패한 군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줄이면 방사청을 폐지해서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국방부 산하에 획득차관제를 신설해서 이 업무를 맡기는 것이 급선무이고 일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그 부패한 군인한테 다시 일을 맡긴단 말이냐?' 이런 국민적인 저항이 사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고 총리나 대통령께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방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에서 집행하던 방위사업 구입체계를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개선책으로 새로 이제 만든 것이 방사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보완하기 위한 검토들을 좀 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다음에 KF-X 사업입니다.

18조가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미국·유럽 같은 기술 강국들도 20년~30년 걸려서도 제대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10년 만에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것은 무리수다라고 지금 사설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핵심기술이 결국 네 가지가 안 된다는 통보를 사실 미국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미국 가서 그것을 국방부 간에 서로 협의하겠다고 나왔는데, 총리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록히드마틴사를 통해 가지고 무기를,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핵심기술들의 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통보가 된 것을 토대로 해서 국방 당국 간에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4대 핵심기술을 우리가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국내 개발도 검토하

고 있고 또 제3국과의 기술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총리님, 자신 있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방부에서는 만약 그 4대 핵심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라도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챙겨 가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관련 기관들이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들은 이미 다 하겠다고 한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죽으나 사나 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2023년·5년 가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지는지 아세요? 총리님하고 지금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18조 대형 국책사업이 실패하면 재정손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전력에 엄청난 공백이 생깁니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책임 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총리님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고민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냥 보고만 받고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고, 아까 미국과의 협의 문제 때문에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잘 되겠지요. 그러나 그 대안도 말씀드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두언 의원 그 대안이 100년 되면 되겠지요. 10년 내에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노력해서 될 문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안 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러면 총리님도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지금 이게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노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해야지요.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현재 KDI 교수로 있는 이주호 전 교과부장관이 최근에 모병제와 징병제를 절충한 군 인력체계 개편방안을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까지 사병이 3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향후 7년 동안 12만 명의 병사를 감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30만으로.

그런데 병력만 감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국방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요.

그래서 같이 30만으로 맞추되 15만 명은 모병제로 전문병사를 도입해서 15만 명을 전문병사로 만들고 나머지 15만 일반병사는 12개월로 군복무를 단축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연구를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1조 8000억에서 3조 2000억까지의 추가 인건비가 나옵니다, 모병제로 인한 전문병사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주호 장관은 뭐라고 연구를 했냐면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함에 따라서 생기는 경제효과가 4조 6000억에서 9조 300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맞춰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군 개혁의 도화선이,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 군 개혁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것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득권 구조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인데 총리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잘 살펴보고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다행히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문제는 종합적으로, 이걸 범정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뭄대책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KF-X 관련해 가지고요. 총리님, 이게 사실은 과거에 여섯 차례 전문연구기관들의 용역 결과, 하지 마라 그런 것을 단 한 차례 어떤 기관에서 좋다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다 실패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걸려서도 거의 못한 사업들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10년 내에 하겠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총리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노력해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리님,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록에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국회 나오기 전에 국방부에 충분하게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점검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점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년 내에는 안 된다, 5년 내에는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역량을 모아서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많이 진행된 부분인데, 보완하고 또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의 대책까지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총리님이 정부에서 역할을 해서 '우리 총리가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감사합니다.

몇 분 안 남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정두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통일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여러분!

서울 성동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입니다.

2015년 우리는 광복 70주년입니다. 더불어 분단 70년입니다. 북한에게도 분단 70년입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스리랑카 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사랑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지고 코끼리가 싸움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진다'라는 지독한 지정학적 숙명론의 속담입니다.

미국에게는 태평양전쟁 승전 70주년입니다. 일본에게는 패전 70주년이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일체화를 선언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의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공동비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한 정상국가화는 거대전략을 통해 하나가 됐습니다. 일본은 전후 총결산이라는 구호로 헌법해석을 변경했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TPP를 미국과 함께 주도했습니다.

중국에게 2015년은 항일전승 70주년이었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을 시작했고 세계 금융질서를 새로 쓰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창설하였습니다.

중화민족의 부활을 꿈꾸는 중국몽은 이제 현실입니다. 미국의 일극질서에 대항하는 신형 대국관계의 실제입니다. 역사상 제국이 멸망했다 다시 부활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외적 현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대독일 전승 70주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견제와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신동방정책을 추구하고 미래를 동북아에서 찾고 있습니다.

2015년을 다시 생각합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입니다. 잠시 우리는 흐릿한 먼 곳을 쳐다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곳, 이 시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70년을 맞는 올 한 해 우리의 외교 안보적 비전과 실천 전략은 지혜로웠는지, 우리는 시대의 징후를 제대로 식별했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양극의 대립이 가져오는 신냉전질서, 중·일 간의 세력전이가 가져오는 불안정, 여전히 포탄이 넘나드는 DMZ, 때때로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신매카시즘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70년 전 역사를 살아갑니다. 남북은 여전히 역사의 미아입니다.

지정학적 사건과 역사적 사실들로 어수선한 한반도의 2015년, 우리 외교 안보는 지정학적 숙명 속에서 강대국의 흥망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비스마르크의 말대로 세계사를 통해서 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뛰어올라 신의 외투 끝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시도를 했을까요?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지정학적 구조로부터 벗어나 평화통일을 위해 과연 어떤 외교 안보적 비전을 설계하고 실천했는지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을 먼저 모셔야 되는데 장관님 혼자 나오셔서 그냥 죽 장관님하고만 문답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최재천 의원 박근혜 행정부 3대 외교 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평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인데, 어떻습니까? 각기 상관관계도 있고 각기의 구체적인 성과 이것을 알기 쉽게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최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아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동북아의 협력과 연관시켜서,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연성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평화를 앞당기고 그것을 한반도의 평화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대륙을 평화롭고 함께 번영하는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그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이 극복됨으로써 유라시아가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천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성과는요? 2년 반 동안 어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민간 교류 등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전반전에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뢰가 절실하다는 입장에서 노력을 지속해 왔고, 다행히 지난 8월 25일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합의 역시 북한의 도발행위는 확실하게 지적하되 또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북 간에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나진-하산 물류사업이라든지 철도연결사업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사실상 북한은 선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불신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핵 포기로 연결되는데, 물론 말의 성찬은 화려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버티고 남북 간의 의미 있는 대화의 통로가 끊겨 있으면 어떻게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선신뢰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는 불신이 오랜 역사 속에서 깊이 쌓여 왔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아야 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상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이런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보다 도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하고 있고 또 대화에도 상당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촉구함은 물론 당국 간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하고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재천 의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력을 계속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렇습니다. '북한 당신들 못 믿겠으니까 먼저 신뢰를 보여 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있고, 그렇지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고 핵경제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또 지지난 정부 시절까지 퍼 주기가 핵무기를 만든다더니 전혀 퍼 주지 않는데도 3차 핵실험이 있었고 북한 핵은 경량화·고도화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안보를 강조한다더니 7년 반 동안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노크 귀순이 있었고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한없이 무능하기만 하고, 북한은 도리어 핵능력이나 미사일의 고도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신뢰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신뢰를 주고받지도 못하고 북한의 그런 군사적 긴장 강화를 완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남북 간에 분단 이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뢰프로세스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그런 과거 정부의 장단점을 보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퍼 주는 것도 아니지만 잘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무조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되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 중의 하나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8·25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합의를 차근차근 이행함으로써 정말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사건이 있었을 때 '원칙이 북한을 변화시켰다'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목함지뢰 사건하고 포탄도발이 있었어요. 그때 또 '원칙이 북한을 변화시켰고 북한이 드디어 또다시 굴복을 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남북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늘 긴장 고조에서 무력 대치로, 다시 일시적 타협으로 긴장 완화로, 다시 위기 재현으로,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을 끊을 수 있는 게 외교 안보 능력이고 그나마 잘할 수 있다고 늘 자랑해 온 보수정권의 힘일 텐데 뭘 잘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통일부장관 홍용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완화, 다시 긴장 고조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단기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을 위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하지만 그런 위기를 해소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굴복시켰다' 그런 용어는 사용한 적은 없고요. 자화자찬을 하기보다는 이루어진 성

과는 차분하게 평가를 하되 또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총리가 답변을 할 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은 이해합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은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장단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타당성·부당성을 바탕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긴 강단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장관은 통일대박론에 동의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력이나 외교·안보 능력, 사회보장 능력이 낭만적인 통일론을 넘어서 통일을 대박으로 현실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대박은 말 그대로 통일이 우리 민족은 물론 주변국에도 큰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일대박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고 또 주변국에도 통일이 여러 가지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한 통일외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통일외교 노력이 주변국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나 도발 때문에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빠른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차분히 이런 성과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통일대박론이 백보를 양보해서 통일 후 얻게 될 이득론이라고 양보를 합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과정으로 통일을 만들어 낸다는 건가요? 이를테면 북한이 스스로 신뢰를 보이고 손들고 들어오는 통일인가요, 아니면 북한 내부 급변 사태에 따른, 스스로의 몰락에 따른 흡수통일인가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통일의 초석을 만들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거기에 이어서 통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재천 의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신뢰를 위해서는……

○최재천 의원 어떻게 대화를 할 건가요? 어떤 과정으로 통일을 만들어 낼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프로세스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합의를 이행하고, 또 필요할 때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고, 또 그 성과를 지켜 내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간의 현재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도 적극 장려함으로써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고 남북 간에 점차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쌓임에 따라서 보다 큰 협력을 도모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협력의 범위가 커진다면 점차 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천 의원 약해요, 답변이 너무.

통일준비위원회가 설립되고 통일대박론이 나온 이후에 불행이지만 통일부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실종돼 버렸어요. 북한은 배제되고 과정은 생략돼 버렸습니다. 통일 만능주의 정책이 남북관계를 지배합니다.

제가 늘 인용합니다만 독일 통일의 설계자 에곤 바르가 이랬어요. '통일이란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회담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례적인 일이 절대 아니다. 수많은 조치와 수많은 정류장을 거쳐야 닿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일부는 과정을 설계하고 과정을 관리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단지 신뢰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계속 선제적으로 요구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자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배제시키는 그런 낭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독백적 담론으로 지금 통일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통일준비위원회가 만

들어진 이후에 통일부의 역할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의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협력기구로서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통일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을 모두 통일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다음에 그런 통일부에서는 신뢰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추진할 것입니다. 신뢰프로세스를 결코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렵지만 계속하겠다라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의지이고 그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중심에는 통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당국 간 대화를 위한 노력 또 민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프로세스가 말하듯이 이것은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통일에 대한, 통일부에 대한 방어는 백번 이해합니다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정부 7년 반 동안의 통일론은 급변사태 통일론이고 흡수통일론이라고 평가를 해요.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통일은 기적을 꿈꾸는 부질없는 희망에 불과합니다. 기적 대망론이에요.

다시 묻습니다만 아까 답변 안 하시던데,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북한이 스스로 신뢰를 보이고 손들고 들어오는 통일입니까, 아니면 북한 내부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입니까?

저는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뢰프로세스는 어떠한 통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과정론이 생략돼 있다고 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정부는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의 통일 정책은 분명 평화통일 정책이고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인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정부의 정책을 흡수통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 정부의 정책을 항상 흡수통일이라고 얘기해 왔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북한의 잘못된 인식과 북한의 문제이지 우리 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분명하게 평화통일 정책입니다.

○최재천 의원 좋습니다. 그럼 평화통일 정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평화통일로 어떻게 갈 겁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정류장을 통해서 갈 건가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그 절차가 바로 신뢰프로세스이고 통일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속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해 나간다는 차원에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 통일부터 큰 통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비전하에 통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장관의 답변과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느끼시겠지요, 지금 아마도? 못 느끼시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물론 원했던 만큼 또 밖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최재천 의원 지금 답변과 구체적인 정책 사이에 얼마나 넓은 괴리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없는 점은 사실이지만……

○최재천 의원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통일론.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희가 구상했던 그런 정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고 또 모자란 부분은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어느 세월에 차근차근 하실 겁니까?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통일부장관 홍용표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급하게 무조건 추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천 의원 대통령께서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참석 후 귀국편에서 북핵 문제를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이라고 하셨고 중국이 우리의 이런 방식의 통일논리에 마치 협력할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워싱턴 정가에 중국경사론 혹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떠한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

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보수정권의 기본 입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혹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진보 진영의 입장은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중국 발언은 엉뚱하게도 평화통일을 통한 비핵화예요.

그러면 비핵화는 전제입니까, 아니면 통일 뒤에 따라오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그런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정부 입장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비핵화와 평화통일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도 비핵화와 남북 간의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분명히 우리가 이뤄야 될 목표이고 북한의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비핵화 이전에 남북관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 개선 노력과 교류 협력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자, 거기서 한 가지 확인합시다.

그러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신뢰의 정도, 신뢰의 수준 속에는 선비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재천 의원 그러면?

○통일부장관 홍용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은 진행할 수 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의 교류 협력은……

○최재천 의원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비핵화가 있어야 대북경협이나 신뢰할 만한 대북 화해 협력 조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 정상화나 화해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최재천 의원 아니, 그게 왜 이분법이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필요한 교류 협력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경제협력은 유엔 제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그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지, 거기 또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대규모의 교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봐야지 이분법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재천 의원 아니요.

다시 묻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과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협력을 꾀하고 어느 정도 화해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고, 그렇지요? 어느 정도 군사적 신뢰 완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수준과 정도는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맞춰서……

○최재천 의원 핵무기의 완벽하고, 그렇지요? 검증 가능하고 되돌아갈 수 없는 수준의 포기입니까, 아니면 이를테면 핵무기 농축을 금지시키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핵사찰을 막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또 여러 차례 유엔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그러한 제재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물론 남북관계 측면의 특수성과 중요성이 있지만 그러한 국제협력과 같이 궤를 맞춰서 진전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천 의원 아니, 우리가 남북 문제의 당사자이고 통일을 주도해야 된다면 비핵화의 단계가 있을 거고 비핵화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막연하게 국제사회 핑계 대지 마시고.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정부에서도……

○최재천 의원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과 우리만의 수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라도?

○통일부장관 홍용표 여러 차례 지금 북한이……

○최재천 의원 단계적 비핵화를 꾀하면 되는 건지 9·19 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면 되는 건지, 어느 거예요, 우리 정부는요?

선비핵화입니까, 아니면 단계별 비핵화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의원 왜 말 못 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략이?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전략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개적으로도 북한 정부에게……

○최재천 의원 어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말을 못 해요?

다른 데 가서는 그러면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천 의원 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의 행동, 어디까지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일단 북한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미리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천 의원 아니, 북한도 예측 가능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보여 주면 저쪽에서 따라온다, 우리의 신뢰라고 인정을 한다,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북한은 9·19 공동성명도 지키지를 않고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선제적인 그런 행동과 진정성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천 의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갑니다만,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안보팀은 무능이에요.

왜냐하면 입으로 통일을 늘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에곤 바르는 '통일은 항상 생각하지만 통일을 입에 달고 살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단계나 전략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전혀 대답을 못 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인 어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소리만 해요. 집행능력이 없는 겁니다, 설계능력이 없고. 도덕적 요소인 신뢰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 나가려고 그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대화를 여러 차례 제안을 했고요.

○최재천 의원 국제관계가 신뢰라는 도덕적 요소로 해결될 일입니까, 이게?

○통일부장관 홍용표 민간 교류를 위한 입장 발표를 해서 지금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남북 간에 무슨 민간 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남북경협기금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방북 신청하면 제대로 지금 받아 주고 있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방북 신청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뭘 다 받아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통일부장관 홍용표 어저께 개성 만월대도 공동 개최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노동자 축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통일이나 논리에 사실상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은 최근 북·중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 북·중 관계는, 북·중 관계와 별개로 또 한중 간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신뢰를 쌓았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점점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지위나 주둔에 대한 변경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논리는 있나요, 설계는 되어 있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런 것들은 다 준비는 하고 있고 우리 안보를 중시하면서 또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통일 준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2005년에 한미 사이에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지위가 대북억제력에서 동북아신속기동군으로 변하는 겁니다.

용산기지는 대북억제기지라면 평택기지는 동북아신속투사기지가 되잖아요. 이때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변화와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정세에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 통일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 그 중국의 해석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충분히 설계하고 있다, 이것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 의원 그다음에요, 작계 501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본 아사히신문이나 조선일보가 다 썼는데, '국회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그랬던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만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프랑스 수상의 말인데, 작전계획이 그래요. 작전계획에 담긴 여러 외교 안보적 의미,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성들, 이런 것들을 통일부는 충분히 참여해서 이야기하고 입장을 반영시켰나요? 이런 것들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계획했다거나 흡수통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논쟁들이 지금 붙고 있는데 '평화통일'이라는 통일부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염려는 충분히 담아 놨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통일부는 필요한 역할을 하고 또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 뭘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작전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왜 말 못 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가 기밀사항이고 또 이 작전계획 자체는 저희의 주관업무가 아니고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천 의원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분명히 협조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 의원 우리의 통일방안과 모순되지 않는 쪽으로 협조가 되어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최재천 의원 강조합니다. 통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통일은 과정입니다. 고도로 설계된 정치적 과정입니다. 그저 국내 정치용 정치적 수사인 대박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 외교안보팀의 과정이 생략된, 북한이 배제된, 그리고 '어떻게'가 빠진 그런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심각한 염려를 표시합니다.

시간이 없어 결론 내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얼마 전 국제사회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외교적 혁명을 보았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과 미국의 쿠바 수교가 그겁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이번 협상을 이란 정권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로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랬습니다.

대쿠바 수교에 대해서도 '쿠바의 붕괴를 위해 애쓰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나 쿠바의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니고, 그런 시도를 했더라도 50년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교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예외고 북한만 예외입니다. 이제야말로 한반도 프로세스, 한반도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현재의 남북한, 북·미 간, 미·중 간, 중·일 간의 교착상황을 타개할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외교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무시로, 그리고 대중국 전략을 위한 전략적 활용으로 전환 중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중국만 있을 뿐 한국의 통일은 없습니다. 이 점이 불행이고, 이 점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외교안보팀의 무능이 커다란 불행입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야 하고, 미·중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스윙

외교에서 벗어나 통일 한국의 미래를 먼저 설계하고 연역적 방법으로 오늘의 외교 안보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총리께 정중히 제안컨대, 저는 현재의 외교안보팀의 비전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독자적인 외교 안보 능력을 설계하고 집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건의해 주시고 재구성, 개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최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이신 양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양창영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생각으로 해외동포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국외 이주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이민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1965년부터 보다 많은 인력이 해외취업, 해외 이민, 해외 진출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보국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50년간 해외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88올림픽 때나 IMF 경제위기 때, 한일 월드컵 때, 2008년 외환위기 그리고 오늘날 한류문화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의 경제적·정신적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총리께서 오전 새정연의 강창일 의원 질의에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요지로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하는데 아까 했던 동 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강 의원께서 제게 질의할 때 '일본의 거류민들이 신변의 위협에 처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상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어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의 협조가,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취지이고 이런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양창영 의원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리 영역 내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청년 해외취업 확대가 대두되고 있는데 해외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현지의 일자리 정보 그리고 취업비자 정책이지만 지금 정부의 해외취업은 이런 현지의 취업사정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취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도전하려는 청년들을 위해서 해외취업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사회, 세계의 한상이라든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제인, 무역인들과의 연계, 네트워크야말로 해외취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지의 사정에 밝은 재외동포사회와의 연계가 현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코트라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 한상 기업 그리고 한인회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중에 특별히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량을 더 모아 갈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영 의원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가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미국의 상원·하원에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이미 호주 같은 데는 별도의 입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미국에 연간 1만 500개의 일자리 쿼터를 확보했고 인도도 5만 1000여 개, 그리고 싱가포르도 5400여 개, 칠레까지도 1400여 개의 비자 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취업 비자 쿼터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그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서 외교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더 가일층 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영 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군대의 조직관리나 인력관리 또 업무관리 시스템 등이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2년여의 복무기간 동안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불굴의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기른 국군장병이야말로 전역 후 해외취업에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부대라든가 8200부대의 경우에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복무하고 제대 후에는 경쟁력 있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에 스카우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역 국군장병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회와 같이 해외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생각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군 경력과 특기 등을 활용해서 제대군인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일자리 발굴, 교육과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인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영 의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가 75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모국으로부터 느끼는 처우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은 재외동포들에게 포괄적인 우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무원 교무판공실을 설치해서 해외 화교에게 모든 편익을 제공하고 기술과 자본을 자유롭게 고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재외동포부, 이스라엘은 공공외교·재외동포부, 불가리아 같은 데는 재외동포처, 터키도 재외동포청, 파키스탄은 재외동포인적자원부 등 각 나라들은 재외동포 업무 총괄을 위해서 정부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성이 강하다고 자부는 하는 우리나라가 왜 재외동포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된 기능과 업무 그리고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은 외교부를 비롯해서 12개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정부기구 신설은 전 세계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입니다.

총리님께서 재외동포의 정책과 사업을 전담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또는 재외동포처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측면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국내 사정으로 말하면 외교나 또 병역이나 조세 등 관련 기관 고유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과연 별도의 청을 만드는 것이 맞겠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정부조직 신설에 따른 부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마는 별도 청을 만드는 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영 의원 동포들의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헌법은 2조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는 재외국민 보호를 규정한 법률을 만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2월 이후에는 그 어떤 진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외국민 보호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정부는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재외국민 보호의 범정부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법률 제정의 취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 법안이, 법률 제정 논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영 의원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6월 달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막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4월 그리고 12월, 국회의원총선거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2.5%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7.1%로 저조했던 재외국민 투표율의 원인은 바로 현지의 사정을 감안하지 못한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재외투표소는 각 공관에만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또 거동이 불편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수 그리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관 이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구 4만 명 이상의 지역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 또 우편투표제 등도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일정 수 이상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공관 관할지역에 공관 외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투표율이 일정 부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영 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다음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역사 교재입니다. 재외동포 2세, 3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사수업 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재가 맞는지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심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선 이 교재의 3·1 운동 내용을 보면 조선총독부 사진과 데라우치 총독의 사진이 3·1 운동주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시 다루어져야 할 3·1 운동의 의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유관순 열사 또한 수형자기록표 사진과 함께 하단부에 비중 없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은 명백하게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과 북의 이념 대립으로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고.

좌우간 이 해당 저자가 이 교재를 작성할 때 참고했던 '한국사 편지'라는 도서를 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이라고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의 일방적인 의견이 삽입되어 있는 이러한 교재들로 인해 재외동포 자녀들은 올바르지 못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유랑하던 디아스포라 유대민족은 지구상 0.2%에 불과한 인구로 전 세계 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우수성과 민족성에 대한 자부심은 고난의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께서 챙기고 계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역사 교과서에 관해서 발행체계를 변경하는 문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해외동포들이, 해외동

포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교과서에도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청소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조국의 현재를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줄 수 있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그 문제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처리하는 문제와 같은,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영 의원 교육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강화 방침이 포함되었고 이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2년 중 183일'로 강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는 대다수 선량한 재외동포의 외국자본을 배척하고 또 국내 투자 의욕을 꺾고 입국을 꺼리게 하는 등의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 자국의 거주자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재외동포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고국 방문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에서는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등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영 의원 재외동포들의 애국심이 대단한 걸 염두에 두시고 재외동포들의 요청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5년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의 176개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돼서 재외동포재단도 제주도로 이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재단의 제주도 이전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또 실효성이 없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다시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공항으로 또 서귀포로 이동해야 하는 점 그리고 다른 단체기관들과 만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이 부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특정 청들은 또 지방으로 가게 되고 제주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외동포재단의 경우에 지방이전에 따라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그 해소방안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영 의원 여야 간에 제주도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일 겁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0.07%입니다. 1만분의 7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년에 약 1조 달러, 세계 7위권의 교역국입니다. 이는 51개 나라의 아프리카 대륙 전체 교역량의 2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교역량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750만 재외동포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이나 미국, 구라파, 일본, 동남아 등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업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상이 곧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이분들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눈은 세계로 돌리고 가슴은 조국으로라는 메시지처럼 재외동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상생협력, 조국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부응하고 한민족의 에너지를 국제사회로 발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양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입니다.

요즘 지역구 용인에서 만난 주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취업난에 자리를 잡지 못한 자식들은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이 금수저를 물려주지 못한 자신의 탓만 같아 자식 몰래 눈물짓습니다.

요즘 신의 직장에는 신의 아들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고위공직자와 공직자 직계비속 군 이행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4급 이상 공직자 중 10명 중에 1명이 병역 면제자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면제율 6.4%보다 훨씬 높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희생과 헌신 뒤에 안주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병역 면제까지 대물림되면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급 이상 공직자들 중 몇 명이나 병역이 면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급 이상 공무원 아들 중 금년 7월 기준으로 1만 7484명 대상자 중에 784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백군기 의원 예, 정확하신데요.

그 가운데 30명이 가수 스티브 유처럼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국적 이탈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도 급증한 추세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977명이 이 같은 이유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기피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고질병이자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갈등요인이라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에서도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 규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군에서 탈영하는 군무이탈은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45세까지 도망자 신세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적 이탈로 병역 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탈영한 사람들보다도 외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행 병역법상 소집이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좀 더 엄격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주는, 그런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였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국적회복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군기 의원 하여튼 엄격하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한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백군기 의원 총리님 들어가시고 국방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애국페이라는 말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백군기 의원 어떤 내용이에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희생하는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백군기 의원 제가 현역 병사들의 생활방식을 조사해서 가상으로 김 일병의 한 달 생활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봉급 14만 원을 받은 일병의 경우에 생필품·전화비 등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도 월 13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인 21개월로 환산하면 병사들은 군 생활이 끝난 후 275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모자란 생활비가 어디서 지금 충당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저희들이 통계 조사를 해 보면 병사들이 월 20여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장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한 17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차관님 답변은 쓰는 것은 맨 밑의 걸 적용하고 받는 것은 제일 위의 걸 지금 적용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심각해요. 이래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군 뒷바라지까지 해야 되느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2017년도까지 병사 봉급을 2배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오르는 물가와 희망준비금까지 포함된 봉급을 고려하면 병사들은 봉급이 올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준비금을 지금 봉급에서 떼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참여정부는 임기 초 상병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던 봉급을 임기 말에 8만 8000원으로 4배 이상을 올렸어요. 대단하지요? 현 정권에서는 왜 그런 걸 못 합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서 설정을 해서 13년도에 12만 원 정도 수준인 것을 17년 말에 21만 6000원 정도로 올릴 목표로 설정했고 지금 그대로,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년 뒤에는 원래 목표했던 20여만 원, 21만 7000원 정도까지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도자들에 대한 의지입니다. 또 군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는 병사들이 담배 한 갑 비용밖에 안 되는 월 5166원으로 개인 일용품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지금 상용품을 확대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슬라이드를 봐 주세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좀 부족하고 아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방재정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래서 의무복무자에게는 월급 현실화와 더불어서 일용품의 경우에 제한된 양을 면세로 주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제한적으로 병사들이 사용하는,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면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면세 물품을 좀 더 다양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의원 병사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또한 병영 내에서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경우에 BTO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그래서 사업체의 투자비를 병사들이 메워 주는 그런 구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BTO 방식이라고 하는데 설치를 한 회사에서 일정 기간 사용운영권을 갖고 있어서 병사들이 자부담해서 사이버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래서 돈을 내고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시간당 390원 정도 내고 있는데 가격을 점차 낮춰 가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만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병사들 부담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부담 원칙 때문에,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당 회사와 계속해서 접촉해 가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저의 생각은 지금 투자한 회사가 거의 원금을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BTL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방부가 매년 리스해 가는 것만 부담하고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지금 BTO 방식이 있는데 BTL 방식 중에서 어느 쪽이 병사들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건 분명해요. BTL로 해서 리스 비용만 국방부에서 부담하면 돼요. 그러면 병사들에게 인터넷에 대한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알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국방부차관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난번 전방에도 가시고 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던데요. 병사들의 어려움을 지금 들으셨지요? 이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젊음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백군기 의원 우리 병사들이 전역한 뒤에도 애국페이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제가……

○백군기 의원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현재 일반 예비군훈련에 지급되는 보상비가 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평균 2만 2000원이 듭니다.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에 맞는 예비군훈련 보상금 지급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의 처우 개선에도—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마는—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이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병사 봉급을 4배나 올려 주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가해서,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비군 중대장·소대장·부중대장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해서, 초급간부들의 삶은 정말 열악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총리님, 사진은 실제로 중·소위 혹은 부사관 독신자들이 거주하는 간부 숙소의 실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역 병사들의 급여, 예비군 훈련 보상비, 간부 숙소 등의 열악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재부에서는 국방비의 처우 개선 예산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올려도 예결위에 가서 깎여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장병 및 초급간부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총리께서 직접 가져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일선 부대에 가 보니까 지금 막사, 옛날 막사로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던데, 아직 그 자체도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까지 계십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과 초급간부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도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게 애국페이예요, '너희들 애국하니까 희생하라'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너무 심합니다.

총리님, 화면을 보시지요.

정부는 1사단 지뢰도발 사건 발생 후에 2016년도 DMZ 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40% 대폭 증액한 3조 28억 원을 편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된 예산을 추려 본 결과 직접적인 DMZ 전력개선비는 122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장·홍보하는 동안 장병 생명과 직결되는 국방예산이 삭감되거나 수년에 걸쳐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비싼 무기를 사기 전에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래서 생명을 중시한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탄복을 하나씩 다 지급한다든지 또 1사단 지뢰도발 당시에 부상 장병들의 목숨을 살린 응급처치 키트, 최소한 이런 보호장구 이런 것들은 다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무후송 차량,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깎였어요, 국방부에서는 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이번 예산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은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기관·단체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군의 신뢰도와 청렴도가 지난해와 올해에는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하락은 MB 정부 당시 육군참모총장만 5명이 변경되고 공군참모총장을 제2롯데월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질했다는 의혹 등 군 인사 문제와 가혹행위 사건 사고들이 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군내 가혹행위가 국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걱정을 드렸고 또 근년에는, 최근에는 방산비리 수사 결과 많은 고위 장성들이 문제가 되고 하는 이런 전반의 문제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의원 예, 총리님 잘 알고 계시는데요.

방산비리 원인에는 실무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역들이 소속된 에이전트와 현역들의 결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기에이전트들, 무기중개상이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어서 방사청 차원에서는 통제할 수도 없고 예비역들의 무분별한 취업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무역중개상 중에서도 무기 체계에 관련된 장비를 다루는 업체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 현 정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기 체계를 다루는 업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기중개상 등록제 그리고 수수료 신고 법제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군기 의원 예, 그것을 제가 다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나오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차관님 나와 주세요.

차관님, 현재 보라매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4개의 항전장비 통합에 관련된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백군기 의원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마치 협상만 진행되면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서 국민과 언론에 보도를 해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 스스로 그 4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포장하거나 또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진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4개의 기술 이전은 처음부터 기술 이전이 록히드마틴이라는 회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승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승인이 조금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왔고, 그렇게 국민에게 그 사실을—그 당시 협상할 때 협상 전략상 알리지 않았지만—확대하거나 포장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군기 의원 차관님, 장관님 답변하고 달라요. 장관님이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국방위원회에서. 그런데 왜 차관은 부정을 합니까? 국회의원들도 최근까지 몰랐어요, 그것을. 그것을 지금 차관이 어떻게 부정을 하세요? 속기록도 안 보세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봤습니다. 그것을 확대하거나 포장한 적 없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렇게 해 왔지요, 마치 되는 것처럼.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 점은 그 사실을 협상 전략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백군기 의원 그래서 그 부분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확대하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백군기 의원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어떻게 획득할 복안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있습니다.

지금 자체,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이전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그 성과가 전력화 시기에 맞춰서 개발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유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제3국과의 협력도 모색하는 등 우리가 목표한 데 맞춰서 개발할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국방위원회에서 장관이 답변한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들어가세요.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 최근 정부 여당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인해서 때 아닌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측의 군사 도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있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갈등 조장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념전쟁 역시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해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갈등을 없애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제가 국사 교과서에 대한 본질은 그것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 논쟁으로 인해서 지금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최근 SNS상에 유포되고 있는 교과서 괴담을 총리,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미군은 점령군으로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기술했으며 북한에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반면 남한에서는 오직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고,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북한의 핵무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기술됐다', 이것도 지금 퍼져 있어요.

이 내용이 어느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북한 관련 서술이나 6·25 전쟁 관련된 서술 등의 현대사 서술에 있어서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적인 시각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서술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정 교과서 개편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SNS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SNS가 아니라 이 교과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교과서 발행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SNS상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실제 존재한다면 검정절차를 진행한 교육부에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교육부에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향적인 서술을 찾아내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숨은 의도를 규명하는 데 대해서도 그 과정에 많은 논란도 생기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명백한 것에 대해서 서술 변경을 지시하면, 수정을 지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장기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검정을 보완하는, 검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역사 교과서를 바르게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데 한계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바른 교과서, 물론 한 가지 생각을 담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다양한 집필진을 구성해서 그들의 전문성이 동원되는 이런 교과서를 바로 만들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백군기 의원 알았어요. 그래서 SNS상에 그런 괴담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보 차원에서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고합니다.

총리님, 국가보훈이 곧 국가안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의원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 대상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가지고 아직도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국가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대상자인 개인이 인증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입증의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사자들이 입증하기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애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또 공헌했음에도 그런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입증이 어려워서 예우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필요하면 보훈처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래서 국가가 해 주고 또 전문관 제도 등을 운영해서 구술을 통해서, 본인의 구술과 주변사람들의 구술을 통해서 그걸 인증해 주는 그런 방법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안보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일반인이 대부분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들이 12만 8000여 명에 이릅니다. 보훈급여와 수당은 국가가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를 경제활동 소득으로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과 또 이분들이 지금 많이 고령화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가재정 여건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 지원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런 여타 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래서 하여튼 뭐 경계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수당 이것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액수에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목표연도를 정해서 최소한 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는 올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근년에, 최근에 국가유공자나 독립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데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상도 많고 다양하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잘 다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리고 월남 파병되신 분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이 부분도 하위 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때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자꾸 예산 탓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법률상 특정 기준에 묶여서 대략 1만여 명의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이 유족수당조차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1998년도 이전에 승계를 한 사람들은 받고 이후에 그거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데 정부에서 계속 예산 없다는 핑계로 이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산의 문제를 제가 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심각해요. 동일 법 안에서 지금 차별받고 있거든요.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무너진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고 희망사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백군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19대 국회에 석양이 깃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나 지금에 와서 국민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아니합니다. 심지어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남은 기간, 국민의 심려를 덜어 드리는 상생의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50년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과연 존

재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는 어느 노학자의 독백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좌편향된 역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각계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본 의원 또한 국회에 등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해 온 바 있습니다.

먼저 검인정 교과서의 안보 분야에 대한 편향 및 왜곡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야당과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독재세력을 구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독자적 자주노선을 추구하는 한편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고 기술하는 등 북한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피난에서 돌아온 자는 피난 가지 못한 자들에게 인민군을 도왔다는 혐의를 추궁하였다. 거창사건과 노근리사건처럼 민간인들이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다." "'발포하라! 모두 쏴 죽여라!' 저는 총을 겨누고 있던 사람들이 군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표물이 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총을 쐈습니다."와 같이 반미의식을 조장하는 등 6·25 전쟁에 대한 편향적 내용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셋째,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이 38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은 각기 자신의 권력을 장악한 지역을 토대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유일체제가 확립되었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것은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자력갱생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었다."는 등 북한체제에 대한 편향적이고 호의적인 서술도 담겨져 있습니다.

넷째, 베트남 파병에 대해 "월남전에서 5000여 명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 밖에도 수만 명의 고엽제 피해,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 등 많은 문제를 남기게 되었다.", 5·18에 대해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했다."는 등 국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향된 역사교육은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게 우리 군이 지켜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과 우리 군이 싸워야 할 대상인 북한의 실체에 대해 의식적 혼란을 불러일으켜 안보의식과 대적관 확립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가장 높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송영근 의원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문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문제는 바로 가급적 조속하게 바로잡아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측면을 선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근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역사교육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과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송영근 의원 총리께서 이 문제를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객관적인 역사 사실에 입각해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그런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로잡자 하는 것이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지난해에 아주 군 사기가 땅에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고 군 내부적으로도 사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8·25, 북한 목함지뢰에 대한 우리 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사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송영근 의원 대통령님께서 하사하신 특별휴가도 큰 도움이 됐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제가 만나 본 병사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사기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송영근 의원 장병들이 '근혜 누나'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길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저는 그런 얘기 직접 못 들었습니다.

○송영근 의원 엊그제 노동당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등장한 KN-08, 이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이미 핵 소형화를 이룩한 것 아닌가 하는 일부의 주장들이 들리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는 뭡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상당히 소형화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술 탑재가 완전히 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밀하게 새로 판단해 가고 있습니다.

○송영근 의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최초의 핵 개발로부터 최대 7년…… 최대 걸린 게 7년입니다, 소형화가. 이미 그 시간이 지났거든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다른 핵 보유 국가들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소형화를 시켜 나가는 데 평균 걸리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송영근 의원 대단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송영근 의원 지금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은데, 국방부에서 이것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KF-X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핵심기술 이전을 이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KF-X 사업이 제대로 가겠냐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심지어 '국민들을 이전을 받을 수 없는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이해다, 바르지 못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KF-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속여야 될 이유도 없고 속일 그것도 없습니다. 사실도 없습니다. 확대한 사실도 없고.

KF-X 사업은 2002년도 국민의 정부 때 시작해서 의사 결정을 미루다가 13년 만인 지난해 결정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대체되는 공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점에 결심해야 되고 또 성공시켜야 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전략과 또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 또 공군 전력 보완 차원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했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부분이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좀 더 잘 설명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미국에 가셨는데, 간 김에 카터 국방장관하고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왔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난 4월 달에 핵심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기술 수출을 신청한 록히드마틴사에다가 기술 이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통보했고 그것이 우리 정부에 전달돼서 우리 정부가, 장관께서 미국의 카터 장관한테 편지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고 또 이번에 대통령 수행에 가서 미 국방장관과 만나는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좀 더 동맹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근 의원 차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장관에게 '장관, 한 1년 3, 4개월 됐는데 기간 중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고 여쭤 봤더니 예산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방 예산 부족이 제일 어려운 점이다.

국방 예산 부족이 군 운용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우리 군은 다른 나라 군과 좀 달리 현행 작전에도 집중하면서 또 국방 개혁을 해 가야 되고 또 양적으로 엄청난 군대를 유지해 가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 가는 데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국가 국방 예산을 한 7% 정도 중기계획상에 인상을 해야 이 세 가지를 같이 충족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늘 예산 소요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의 편성 운용 원칙상 4%여 정도밖에 인상을 받지 못해서……

현행 작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방위력개선사업

이라든지 또 장병의 사기와 직접 연결되는 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영근 의원 그러면 국방개혁 2020 이것 제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한 50만 수준으로 줄이고, 병력 규모가 축소된 데 따른 재래식 전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가 첨단 과학 장비를 구입해서 그 전력이 줄어드는 부분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려면 적정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부대개편과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년 주기로 우리가 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세부계획 지표를 내놔야 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국방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가적 재정적인 관심을 좀 필요로 합니다.

○송영근 의원 국방개혁 2020 이것 전시작전권 환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계획입니다. 이후 적정 국방비가 제때에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매년 사업계획이 삭제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하게 되자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1430이라는 묘한 명칭을 붙여서 목표 연도를 10년 연장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눈가림입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이런 내용부터 여러 가지 내용상의 개정 소요가 되어서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의원 또 하나, 국방개혁 1430은 매년 7.2%의 국방비 증액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된 계획인데, 그리고 이것 대통령께 보고됐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중기계획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송영근 의원 재가 받았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재가 받았습니다.

○송영근 의원 그렇지만 최근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3~4%, 그래서 기본계획 대비 3% 이상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3~4년만 되게 되면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방부 개혁에서 계획하고 있는 킬체인, KAMD, F-35 등 주요한 사업들 또다시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것 해결할 방법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중기계획상의 예산을 우리가 다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전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국민들이 안보에 걱정하지 않도록 킬체인이나 KAMD 이런 주요 핵심 사업들은 목표 연도에 맞추어서 방위력을 개선해 갈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의원 만약에 시행 불가능하면 가정을 5% 이내로 줄이세요, 예산 증가율을. 되지 않는 허황된 7.2%를 놓고 하니까 계획이 계속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계획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는 첫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 행복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송영근 의원 그러나 지속되는 국방비 부족이 누적되어서 국방 운영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방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신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군에 가고 싶어도 입영되지 않는 인원들, 이 젊은이들이 현재 5만 2000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쓰고 있는 부대가 14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백군기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실경비의 절반밖에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특히 무형전력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훈련 역시 예를 들어 육군의 경우 육군 예산의 1.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훈련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강군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주요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평균이 3.69%입니다,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2.3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병력 1인당 국방비 역시 전 세계의 48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방비 투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전 총리께서는 적정 국방비를 GDP 대비 3%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방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걱정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송영근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GDP 대비 국방 예산은 2015년도에 2.35%로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리님, 최소한 GDP 대비 2.5%만이라도 확보되어야 가장 아쉬운 부분들만이라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힘들어지는 우리 군과 우리 후배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총리님께서 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힘써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나 또 필요성에 관해서는 정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 여건이 지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만큼 국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한 노력을 좀 더 하고 지혜를 같이 모아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대비태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지하철 해킹사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보고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영근 의원 사이버는 현재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면 테러조직의 사이버 공격으로 교통은 물론 금융·발전소 오작동, 전기 공급 중단, 병원·공항의 마비 등 국가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이버 대비 능력은 아직까지도 대단히 미온적이고 수세적임을 지적해 드립니다.

지난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서 미국이 즉각적인 사이버 응징 보복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에게는 대응할 능력과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또 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하부에서는 관계부처의 이기주의와 법령의 미정비로 시행태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이버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리께서 지금 특별히 노력하고 계신 분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가 이제 ICT는 많이 발전해 있는데 사이버보안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못 기울였고 또 보안요원들 양성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년 들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고서 보안인력을 확충하는 문제, 그것을 위해서 또 시스템을 확보하는 문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이버보안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단기간 내에 가급적 빨리 보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위기가 왔을 때 조처하는 것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특히 군의 사이버 수행태세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전시에 국가 사이버전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주도합니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의 인력, 조직, 전문성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미약한 수준입니다.

총리님, 북한을 비롯한 우리 주변국의 사이버 전력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보다 심지어는 북한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근 의원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 우리의 사이버 인력 수준 이것은 북한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방어능력이 안 갖춰져 있고 특히 사이버 공격 능력은 엄청난 비대칭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인력과 예산이 2~3배 정도는 증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시고 이 문제는 총리께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총리께서 도와줄 수 있는 분야, 국방부의 능력을 벗어난 분야에 대해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최근에 류길재 전 장관께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통일부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요, 전 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자신 통일부장관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직 장관들이 쌓아 온 그런 업적과 능력 또 노력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뼈 있는 한마디 같은데 홍 장관님께서도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북한의 열병식 보셨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봤습니다.

○송영근 의원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번 열병식 이전에 미사일 발사,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고 개혁 개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변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압박이나 국내외 불리한 정세 등을 고려해서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로 볼 것인가, 어느 쪽으로 장관께서는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열병식 계기에는 북한의 도발이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수세적으로는 계속 도발 위협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도록 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초·중·고등학교 학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달성해야 될 것인데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영근 의원 그런데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교육 실적이 2012년에는 13만 3000여 명 그다음에 13년도에는 18만 5000여 명, 2014년에는 9만 7000명, 반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 제출된 자료에서 통계적인 수치가 줄어든 것은 교육 방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떤 강의 중심의 그런 교육에서 체험형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체험형 교육을 하면서 인원수는 줄었지만 질적인 부분은 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육을 질적은 물론 또 양적으로도 계속 늘리고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통일부 차원에서도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송영근 의원 통일교육 강화는 역사 교과서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역사 교과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그 내용에다 통일교육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전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통일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수의 법안들이 그 내용보다는 누가 발의했느냐에 따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9대 국회에 발의된 총 1만 6292건의 법안 중 67%에 달하는 1만 887건의 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꼭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송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재벌의 이익을 앞세워 서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적인 FTA 협정, 일본의 안보 법안을 앞세운 재무장과 전쟁국가화 방치, 양파껍질 같은 방산비리와 주먹구구 전력증강 사업으로 인한 안보 공백, 대한민국 외교 안보 현재 주소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정부가 나를, 내 가족을 지켜 줄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화려한 외교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의 외교 안보는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에게 등 돌릴 그들만의 외교 안보 정책은 결국 안보 위기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심각합니다.

총리도 역사 왜곡에 반대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입니다.

○김제남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국회 앞에 내걸어졌던 플래카드입니다.

총리, 이거야말로 심각한 왜곡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남 의원 플래카드 내용.

이게 사실이라면 이 교과서 검증한 박근혜정부 총리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일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에 관해서 비판 없이 교과서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국정 교과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교과서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집권 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을 게재한 것인지, 총리께서는 이 플래카드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표현을 전체적으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김제남 의원 사실입니까, 왜곡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제남 의원 플래카드 내용.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지금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그 내용들이 담겨서 비판 없이 수용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남 의원 심각한 왜곡이지요.

바로 이렇게 정권의 욕구에 따라서 왜곡과 허위사실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고 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일본 아베 정권과 다름없는 역사 왜곡 그리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교과서 편제를 바꾸는 문제는 왜곡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바른 역사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하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 본 의원은 그동안 한중 FTA가 졸속·밀실 추진되었다라는 문제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중국의 제도 변화도 협정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어요. 중국은 한중 FTA 협정 서명 이전에 4월 28일, 화장품 각종 의류 신발 기저귀 등 인기 수입품 관세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총리, 화면에서 보듯이 이 품목들은 정부가 한중 FTA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 품목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를 했던 내용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뭘 어떻게 홍보했다고요, 지금 저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했다는 말씀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제남 의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중 FTA의 수출이익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도자료 낸 내용이 사실이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한중 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제가 질의한 것에 정확하게 답을 하십시오.

한중 FTA에서 화장품 관세는 5년까지 해서 3.7%로 인하되고 중국은 화장품 관세를 2%로 자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를 알지도 못하고 한중 FTA 협정에 반영도 못 한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까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섬유나 생활용품, 거기에 뭐 화장품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FTA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취약 산업 분야를 다, 양허 대상에서 관련된 검토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노

력들, 보완책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중국은 2% 인하했는데 우리는 3.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그래서 수출 증대되고 이익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홍보하고 협정에 반영도 못 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협정은 국제적인 웃음거리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언론 오보까지 내게 한 책임에 대해서는 총리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중 FTA 가서명 직후 3월 10일에 중국은 자발적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했습니다. 한중 FTA 가서명 직후인데 이것도 한중 FTA에 반영 못 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구체적인 항목들에 관해서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한중 FTA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가 불리하게 체결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협상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김제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중국이 관세 인하를 했던 것, 그리고 개방 수준을 확대한 것, 이것을 반영해서 한중 FTA 체결에 반영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재협상 또는 보완협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상의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국회에 넘어온 비준동의안 역시 졸속입니다. 정부가 한중 FTA 경제효과로 GDP 0.96% 성장하고 후생이 146억 불 증가한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이 경제효과 분석을 했던 기준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2007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지요. 8년 전이면 영향평가를 할 때 지금과 비교할 때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IT 분야 등 수출 무역이라든지 산업구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기가 힘들지요.

최근에 이 기준 연도 지표가 데이터가 바뀌어서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 지표만 토대로 해서 협상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최근까지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TA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이번 5월 달에 기준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7년 전, 8년 전 데이터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인용했다면 보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피해를 보는 영역에 현실성 있는 대책과 또 영향평가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들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양자 간 협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더 유리한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어렵게 FTA 성사에 이르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저는 보다 철저히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경제영향평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최근 데이터를 반영하셔서 경제영향평가 다시 작성하셔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한중 FTA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헤아리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품목별로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이익을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를 보는 품목에 관해서는 피해산업

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비롯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면밀하게 스크린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제가 근거를 드립니다.

화면 보시면, 이것은 중기청 자료입니다.

한중 FTA로 인해 중소기업 중에서 수혜 업종은 3개 또 중립 업종은 6개, 피해 업종은 자그마치 15개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한중 FTA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기장비 그리고 전자부품 수혜가 일부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요. 우리 중소기업 산업구조 전반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균형이 깨지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FTA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이니까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득을 얻으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남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를 드린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스크린하도록 부처로 하여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중소기업 대책을 내놨어요.

화면 보십시오.

정부 대책 무엇인가요?

우리 총리께서 알고 계신 것 설명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피해 보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기본이 될 것이고 또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저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업종·품목에 대한 피해는 정부도 몰라요. 또 해당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내가 피해자가 될지 수혜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부랴부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과 어떤 품목이 피해를 입는가 다시 조사 연구에 들어갔어요.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중소기업 대책 이렇게 충분하다, 어떻게 총리가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피해가 커지는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김제남 의원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부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TPP 얘기 잠깐 드립니다.

TPP 역시 졸속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TPP 전략포럼 내용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은 '알려 줄 수 없다'입니다.

TPP 전략포럼 이것 밀실 비선조직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포럼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제남 의원 아는 내용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세세한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세밀하게 알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보고듣고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자, 이것에 대해선 총리가 모르신다면 해당 장관에게 경고하십시오. 논의 자료와 결과를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알릴 수 없는 민간포럼조직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뭔가 비선조직 아니고서야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법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왜 이런 데 놔두고 알지도 못하는, 총리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비선조직 만들어서 관련된 자료 내놓으라 하니까 '줄 수 없다'…… 왜 TPP 전략 이런 데서 논의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리 역량을 모아서 대처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자원들이 있다 그러면 다 협조를 받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존재하는 사실이나 그 내용,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전혀 보고 듣지 못했

습니다.

○김제남 의원 TPP 전략포럼 폐지하시고요. 가장 정상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조직을 통해서 TPP 논의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개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협상과정에서는 알려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처가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 한미 FTA가 타결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지요, 발효되기까지? 타결에서 발효까지.

○국무총리 황교안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꼬박 5년이 걸렸어요. 꽤 오래 걸리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김제남 의원 TPP 역시 기간이 좀 걸리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저희들로서는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TPP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관련국들 10개국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PP 가입이 실익이냐, 이익이 많을 거냐 적을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TPP 논의가 밀실협상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국민과 국회와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TPP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익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충분한 상의를 하고 필요한 지혜들을 모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 들어가시고 외교부차관 잠깐 나오십시오.

본 의원이 이번 대정부질의를 준비하면서 외교부에 TPP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해명하시고요, 시정 어떻게 하시겠는지 대답하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TPP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다루어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에서 주무부처로서 다룰 일입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외교부 나름대로 이러한 데 대해서 지원 역할을 하고 정부 내 협의과정에 참여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 주신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시지요.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으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하거나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 한미연합사령관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안보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그러면 미군이 유엔사령관 자격으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추진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익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김제남 의원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유엔사령관 자격으로 주일미군 다 포함해서 주일미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반도에 개입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 당국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 가고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또 그런 부분에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뭐가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알려져 있지 않은데.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외국

군대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제남 의원 이것은 유엔연합사령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동의, 미국의 합의·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시에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구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미 간에 충분한 상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충분한 상의가 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해당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일본 안보법안의 통과로 한반도 주변 군사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안보불안,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해결 못 하고 현재 문제는 현재 문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대일외교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 대일외교 전면 재점검을 요구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문제는 둘 다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최근의 내국 사정을 반영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을 설득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국방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문화의 교류 이런 호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교류를 해 간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일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지난 월요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사업에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은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대비하느라고 최근 뉴스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김제남 의원 이 방산비리, 거의 매국노나 하는 짓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방산비리 있으면 안 된다는,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부가 단호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께서도 국정책임자입니다.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하시면 총리로서 국민들께 하셔야 할 정당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방산비리 전반에 관해서 지금 철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합동수사단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든지 방산비리는 결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도입 사업이라는 FX 사업 그리고 KF-X 사업, 좌초위기인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국방부차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방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국회 오후 일정 시작되기 전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각오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미 정부가 승인 거부한 4개 핵심장비 관련 기술이전, 이것 물 건너간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의는 크게 많이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무기상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인데 아까 국방부차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미 간에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도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안으로서 우리 역량을 키우는 문제 또 만약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제3국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방사청 담당자는 '미국이 승인 거부한 것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확답을 한 바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대안 얘기하시는데 대답은 시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성·진정성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저 막연한 먼 뒤의 일이다 해 가지고 지금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은 당연히 이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제남 의원 F-35 개발에 우리가 뛰어들었는데요. 이것 처음 계약할 때 아무런 보증도 조건도 없이, 심지어는 이 기체를 직접 타 보지도 않고 사겠다고 나선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검토를 했고 또 성능·기능에 관해서도 살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냥 말만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제남 의원 자료 보십시오. 이 F-35 개발에 참여했던 나라들 거의 다 빠져 나가고 있지요?

저는 국민혈세 수조 원을 들여서 우리가 무기를 사는 입장인데 왜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갑의 위치예요. 왜 을의 위치가 돼 있는 것이지요? 아니, 갑을이 이렇게 바뀌어도 유분수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청와대가 FX 사업 논란이 되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 그 부분을 조사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론에 보도가 돼 있으니까……

○김제남 의원 그럼 뭐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청와대, 대통령이 이 FX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실을 이제 처음 안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진행상황에 관해서 어디까지 보고했는지는 부처에서 알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보고들을 하고, 상의를 하고 정부부처 안에서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FX 사업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당시 국방부장관 그리고 청와대 현 안보실장, 김관진 실장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의 책임자가, 국방장관이 김 실장이었던 것은 맞겠지만 책임이라든지…… 이 문제는 지금 책임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계약 자체를, 계약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 조건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보완책들을 좀 강구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책임을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제남 의원 손 놓고 방치한 사람도 있어요.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 사업을 위해서 진력을 다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청와대가 조사를 하고 있다면 청와대 안보실장부터 외교안보수석까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규명하셔야 됩니다. 그 일부터 시작하셔야지 그것은 하지 않고 방사청에 이렇게 책임 돌릴 문제는 아니다, 물론 거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총리, 이번 기술이전 실패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술이전 자체의 어려움은 있지마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계약 당시부터 조건부로 계약한 것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인데 그 외의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제남 의원 정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걱정을 하실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남 의원 국방과학연구소가 '4개 장비 국내 개발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것도 3년 당겨서. 그런데 이미 국방연구원 등에서 국내 개발은 기술 수준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내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꾸 국내 개발을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제3국에서 또 수입해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체계통합기술까지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의 시기나 또 국방계획으로, 예산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다 개발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은 세밀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방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은 또 관계부처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걱정은 지금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저는 총리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안보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토를 위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맞습니다.

○김제남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맞습니다.

○김제남 의원 그러한 데 노후 전투기로…… 새로운 전투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구멍이 났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은 굉장히 주먹구구예요. 뭐가 안 되면 이렇게 할 거고 뭐가 안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보고 대책을 믿으라고 합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를 믿고 맡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KF-X 사업은 아까……

○김제남 의원 혈세 탕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심각한 안보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국방부차관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오래전부터,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결단을 못 하고 결정을 못 했던 부분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작업에 들어가서 국방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하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 계약할 때 록히드마틴사하고 협의할 적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술이전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조건부계약을 이미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미 국방부로부터 '그 기술이전이 어렵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준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해 가면서 양 국방 당국 간에 협의도 해 가면서 이것이 안 될 때의 보완책 또 그 기술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해 나간다는 것이지 이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형무기 도입될 때마다 각종 권력 실세들의 로비 비리 사태들이 일어나고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하고 굉장히 불평등한 계약 추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청와대 조사 관련해서도 방사청에게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이제는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안보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FX 사업, KF-X 사업 그 실태 규명하고 제대로 된 자주국방 계획을 위해서, 국민들 안보를 위해서 정확하게 철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 기억으로 아마 1년 좀 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방산비리 합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위 장성 출신들을 사법 처리하고, 이런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보완돼서 우리 KF-X 사건이, 그 케이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 다른 비리나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총리께 유감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의 관련해서 저로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의 대정부질의를 처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아주 구체적인 질의를 이십여 가지가 넘게 이미 요청하고 그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서 답변하시지 못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자료를, 의원님 질의자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전 국회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그때 살펴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입수하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자료를 일찍 주시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지났지만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실한 자원외교로, 주먹구구 무기 구입으로 혈세를 탕진하는 정부,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전쟁국가화에는 나 몰라라 손 놓고, 꽃다운 우리 젊은 군인들의 생명으로 안보장사 한다면 안 되는 일이지요.

국민을 지킬 자격 없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재벌들 곳간 채우는 FTA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부가 국민의 경제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권력의 안위만을 위한 편향적인 국정 운영, 안보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교 안보 정책만이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의원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출신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월 9일 노동당 창건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다탄두 핵이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후 끊임없이 도발을 일으키던 끝에 드디어 북한은 그 핵으로 툭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불지옥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청소년·학생들 중에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믿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진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 중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주창하면서 '북한의 핵은 자위 차원에서 필요한 무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나 인식의 밑바탕에는 대한민국 수립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로서 주권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 어제지요? 어제 야당 의원께서 주장한 내용 중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중에 이미 개표가 진행되는 등 개표 부정선거가 있어서 3·15 부정선거보다도 부정선거의 정도가 더 심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의원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 말씀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대수 의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 저녁에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개표 결과가 미리 알려졌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또 득표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선거 부정과 관계되려고 그러면 개표수가 영

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명백하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경대수 의원 ‘구국전선’이라는 사이트, 대북선전 사이트인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경대수 의원 2013년도에 북한 정권이 구국전선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바로 이와 같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3·15 부정선거의 재판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남한 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혼란을 부추긴 사실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그 당시에 그것을 국민들이 전혀 믿지 않으니까 북한이 계속 선전 선동을 하다가 포기했다고 보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말 전혀 믿지 않고, 확산되지 않고 그냥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대수 의원 2013년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단호한 그와 같은 사실 공개 내용이 있어야지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일단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백한 해명 자료를 발표했고 또 오늘 국회에서도 좀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종합해서 판단할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대수 의원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역사 교과서 문제 말입니다.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47.6%, 반대가 44.7%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이 아니고 검정체제로 시행된 게 여러 해 걸쳐서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을 포함한 이와 같은 국민들이 검정체제로 가는 것보다 국정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여론이 앞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좀 보실 테니까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어떻게 여기저기를 손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정화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검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몇 년 시행해 보니까 이런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학생들을 직접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시면서 국정화의 의견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인들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반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국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기도 하고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려를 반영하는 여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의원 국정 교과서로 가자는 그와 같은 주장을 언론에서 접한 내용을 보면 역사 교과서가 과거에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차지하는 게 아주 적었는데 최근에 그게 부쩍 늘어났고 거기에 관해서는 아직 역사적인 사관의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집필진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이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이 있는데, 총리님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중세 이전, 고대나 중세까지의 역사에 관해서는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근현대사에 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에도 비중이 우리 역사에 비추어 보면 최근 100여 년 그 당시의 기록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앞으로 교과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균형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대수 의원 국정 교과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지금의 교과서가 좌편향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이루어진 선거는 유엔의 감시하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선거이고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하는 내용은 거꾸로 ‘남한의 정부 수립은 남한 내에서만 이루어졌고 북한 정권의 수립은 남북한 동시 선거로 이루어진 선거다’라는 취지의 기술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편향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지금까지의 검정 체제로는 그게 바로잡히지가 않으니까 국정으로 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집필진들의 대충 역사관이 어느 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보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집필진의 사관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종전에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7종이 있었는데 그 7종이 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되는 이런 교과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의 문제가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점들을 추론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여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명시적으로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취지는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가치로써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자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방향입니다.

○경대수 의원 총리님,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이 2014년 12월 19일 날 해산됐습니다. 그 이유가 '주도세력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산되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한 바 있거든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경대수 의원 그런데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지금 이석기 전 의원이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조직 재건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 최소한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하려는 시도 아닌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우리 입법의 미비로 해산된 정당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리 문제라든지 또 그것의 재건 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집회를 가졌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어떤 의도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펼쳐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의원 얼마 전에 어떤 변호사지요, 그분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 부분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 똑같은 용어 아닌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인민민주주의, 다시 말씀드려서 민중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그 민중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자·농민·빈민이 주인이고 거기 일을 돕는 지식인 그룹이 그쪽 편이고 나머지는 다 민중민주주의에서는 배척되어야 될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민중민주주의는 특정 세력을 민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결국 혁명세력들을 모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이 민중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그 안에서도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을 핍박받는 근로자라고 하면서 그런 소수계층들에게 어떤 세력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 세력들을 타파하자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NLPDR입니다.

○경대수 의원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북한이 인민민주주의를 가지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니까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바꿔서 그와 같은 대남 통일전선전략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동조자를 규합하는 과정이 6·25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인민민주주의 그 자체로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가 지금 노동자·농민·빈민이 주인 되는 세상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일성 3대 세습으로……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의원 김일성 왕족의 체제고 나머지는 다, 얼마 전의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봤지만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인민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로봇 부속품으로 지금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결과적으로 지금의 북한의 체제는 그렇게 왜곡돼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대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민중민주주의 개념에 입각한 민중사관이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 집필진 중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

다고 해석은 안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뭐 그렇게 걱정을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론분열을 막고 정부가 의도한 대로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야당에서 걱정하시는 친일 미화라든지 또 유신으로의 회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어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개방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이 현대사회에 그런 걱정이 현실화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경대수 의원 총리님, 2005년 9월에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이 꼭 10주년이 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북한은 그 사이에 핵을 소품종 다량화해 가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미국과도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외형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에 대해서 그와 같은 도발을 자제해야 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국 외교부장이 9월 19일 '6자회담 구성원은 유엔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반도 긴장 조성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지난 9월 14일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영변 시설 등에서 핵 활동이 진행 중이며,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결의에 참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과 북한의 태도만 가지고 앞으로 남북 간의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우리 한국 쪽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비핵화에 언제든지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평화 구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경대수 의원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 중에 우리 한미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정권인데 언제 정말로 핵으로다가 우리를 한 방 때릴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핵우산으로 보호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와 같은 보장책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핵의 능력, 미사일의 능력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북한이 핵으로다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소량화, 다탄두, 소품종화까지 개발할 능력을 완비한다면 과연 그때도 끝까지 미국이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답을 이번에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양국 간의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양국 정상 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대수 의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리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독도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총리님께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가 지난해 편성된 사업비가 30억 원이 불용 처리되고 금년에 21억 반영됐지만 입찰단계에서 지금 공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2009년에 추진된 사업이지만 포기되고 2014년 10월에 서해안 백령도로 옮겼습니다. 문화재청의 반대로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독도 방파제 건설은 2020년까지 4074억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지만 2013년 2월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된 후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국립 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2010년 1월까지 시행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사자 조형물 독도 설치하겠다는 것도 금년 8월 7일 독도 강치 기원 벽화로 변경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본은 그렇게 안 볼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압력을 가해서 한국이 머리를 숙였다, 얼마 전에 자기들끼리 비공개 대화 중에 '한국은 기다리면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10월 말쯤인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에도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 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지켜 오신 원칙을 지키면서 다시 또 일본과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 원칙을 포기하시면 그 순간에 일본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고 우리 의견은 더더욱 무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독도는 역사적 또 지리적,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지켜 낼 것입니다.

○경대수 의원 일본과 경제·안보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력관계를 계속 다져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시면 그것 역시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황교안 원칙은 확고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경대수 의원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했습니다만 한반도 위기상황이 조성됐을 때 과연 일본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한국의 동의 없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의 과거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자기들 자국민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다, 생명과 재산에 대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은……

○경대수 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고 단순히 대화만 갖고 설득해서는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웠고, 세우고 있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한반도에서 비상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일본의 후방협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100% 통제 가능한 그와 같은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거지 그와 같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거꾸로 외세 개입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더 단단한 안보 세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수 의원 일본이 유엔에서의 기여금에서 세계 2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상임이사국 진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수 의원 역사를 잊고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 같은 나라가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면 중국이 군사비 지출로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은 지금 안보법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한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4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미국이 흔쾌히 동의한 가운데 구입했습니다. 방위장비청도 도입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 없이 핵무기 소품종·다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첨단무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투기사업을 추진했는데, 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 등 이와 같은 것 도입하는 데 미국에서 거부당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핵심 기술은……

○경대수 의원 우리 능력으로 개발하려면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미국에서는 그 네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기술을 이전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설득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을 위해서 몇십 년이 걸린다 하는 그런 것은 예측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고, 그 진도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한 안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 완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경대수 의원 대한민국의 집단이라 할까, 이런 데서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랄까 집단이 과거에 군인들이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군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20%도 안 됩니다.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지난 11월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실시했는데요. '군을 못 믿겠다'라는 응답이 37.8%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의 실패랄까, 또 지금 앞에서 총리님 말씀하셨지만 방산비리로 줄줄이 많이 구속기소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죄가 또 연일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산비리 부분은 제가 지난번도 한번 그렇게 대정부질문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수준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 제대로 찾아내 갖고 처벌하고 있나요, 우리 수사기관 검찰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세 자리 숫자의 입건을 하고 있고 그 상당 부분을 구속하고 있고, 지금 무죄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증거법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무죄가 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극소수고. 대부분 다 유죄가 나고 있고 또 중형이 선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방산비리에 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고, 이것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서 방산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정부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산비리가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방산의 물량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건 한 건이 중요하고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비리수사, 척결하고 바른 방산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대수 의원 군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저 버리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경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경대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垠希 議員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산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군이 문민통제를 벗어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무력으로 정변을 일으켰던 아픈 경험을 두 번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과거 국정 교과서에서 왜곡된 안보역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우리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이유로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역사 교과서에 많은 오류, 사실오류와 또 편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편향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또, 예를 들면 진행 과정에서 필자들이 소송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균형 있는 내용을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잘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교과서 개편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權垠希 議員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진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균형, 바르게, 올바르게 역사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다라는 그러한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요 근간에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조금 전 질문에서도 이 국정화와 관련된 찬반 여론조사가 아주 팽팽하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팽팽한 여론의 그 골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고 현실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이 분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도 지금 꽤 높다라고 보고 있을 텐데요,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논거로 반대하시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생각을 획일화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의식의 고정화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

○權垠希 議員 아니, 반대하시는 논거만 말씀해 주시지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정화제도와 검인정제도와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면서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도가 보다 더 다양한 교육 또 보다 더 다양한 인성들, 창의적인 교육들을 이루어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보다 민주주의 질서에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근거로 반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실 필요가 더욱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더하여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례 이외에 실제 과거에 국정 교과서의 폐해를 다 국사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은 군이 문민통제에서 벗어나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정변이 두 번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변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생긴 출발점이 뭡니까? 교과서 7종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검정체제를 도입했는데 현실은 그것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시작된 것이고요.

이번에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고 할 때, 국정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나라가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역사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위촉한 사람들이 쓰는 것인데 누구들이 그것을 집필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과서 작업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잘 구성을 하고 전문성도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경험도 있는 이런 분들을, 한두 분이 아니고 지금 교과서는 아마 집필진이 적은 경우는 한 서너 명, 많은 데 한 일곱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집필진을 같이 모아서 이분들이 균형 있게 객관적인 사실을 잘 검증해 가면서 만들도록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들면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국정에 이런 폐해가 있었다 하는 이런 부분은 역사가 알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쳐서 바른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에게, 물론 이것이 대학이나 또 연구를 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의견을 다 제시해서 그분들이 공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학생들에게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이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교육할 때, 공부할 때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인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權垠希 議員 총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찬성하는 논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총리님은 우리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국정을 통할하고 국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에 대해서도 아주 진지한 자세로 경청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반대가 전혀 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신 있게 목소리를 분명히 내 주셔야지 '아, 우리 정부가 그나마 균형, 균형 하는데 그 균형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거 국정 교과서에서 역사적 폐해를 경험했던 그러한 사례가 제가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군의 문민통제가 무너진 두 가지 사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왜곡이 됐고, 그것을 국정 교과서에 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사례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의 국정 교과서의 폐해 말씀이신가요?

○權垠希 議員 예, 특히 군의 문민통제와 관련해서였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부분을……

○權垠希 議員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더 말씀을,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68년 2차 국정 교과서에 따르면 5·16 쿠데타지요,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6 혁명은 4·19 의거의 계승이었으며 발전이었다'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에 이에 대해서 5·16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 잘 아실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93년, 95년, 03년 무려 세 번에 걸쳐서 '5·16을 쿠데타다. 즉 헌법질서에 반해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무력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권력을 찬탈한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지었고요. 대법원 역시 11년에 마찬가지로 5·16을 같은 쿠데타로 규정을 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맞고, 5·16은 쿠데타이며 정변이 맞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도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걸 사법기관에서 한 것이 역사적 평가의 모든 것은 사실 아닐 것입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權垠希 議員 적절치 않은 이유로 어제 '논란을 야기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이 국정화와 관련된 논란은 국민들 속에 야기되어 있고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총리님은 대통령과 함께 이 논란을 봉합하시고 통합을 위해서 보다 좋은 안을, 보다 좋은 안을 도출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맞다고 본다. 5·16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공직자로서 균형감 있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 주셔야지 국민들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단초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균형 있게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쓰는 게 아니고 그 집필진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만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權垠希 議員 저희가 과거의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총리님, 이 과거의 국정 교과서의 폐해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다, 5·16에 대한 성격은 이것이다,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맞다고 본다고 말을 못 하시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에 국정 교과서에서 있었던 그런 잘못이나 오류, 뭐 물론 과거에 국정 교과서에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될 것이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집필진에 관한 말씀을 예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바른 교과서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權垠希 議員 총리님, 총리님도 그리고 대통령도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고 통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청문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權垠希 議員 논란이요?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들이 또 많은 논란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총리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權垠希 議員 좋아요. 총리님, 그러면 제가 한 발 양보해 드릴게요.

총리로서 굳이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겠다면 헌법을, 헌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헌법재판소의……

○權垠希 議員 이 5·16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방식에 의한 그런 합법적인 권력 교체였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무력에 의한, 국민을 무시

하고 헌법을 위배한 정권 교체의 방식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걸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權垠希 議員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시지만 또 한편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에 관한 이 질의에도 권한과 의무 범위 내에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9월 14일에 박근혜정부 2년 6개월 국정 1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사외교에서 성과라고 여러 가지가 적시가 되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이 발굴하고 분류한 중국군 유해 송환입니다. 그 송환으로 군사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취지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垠希 議員 이 중국군 유해 송환은 2013년 6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시에 류옌둥 중국 부총리에게 유해 송환을 제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총리, 이와 관련된 국정감사에서의 기지적한 사항을 보셨겠지만 정부는 적군으로 분류한 중공군 유해 505구를 작년과 올해 두 차례로 나눠서 중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이 유해들이 100% 중국군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식별작업을 충분하게 했다고 제가 들었고, 의원님께서 그 질의 자료를 또 내셨길래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나 또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그때까지의 과학적인 기술방법으로서는—지금은 또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검증이 된 것이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잘못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權垠希 議員 이미 송환된 유해에 대해서 잘못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權垠希 議員 그 보고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해 식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아 식별 및 신원 확인입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權垠希 議員 하지만 당시의 한국군·중국군·북한군은 유해 그 자체의 외관을 가지고서는 피아 식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방법이 DNA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에는 DNA 감식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權垠希 議員 ‘살인의 추억’ 시기를 말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훨씬 더……

○權垠希 議員 그 이후에 유해발굴단은 이루어졌습니다. 유해발굴단은 실종자 유가족 DNA 시료 3만 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해발굴단은 발굴한 유해와 유가족 DNA 시료 매칭을 반드시 해야 하나 2015년 4월, 올해 이전까지는 적군으로 분류된 1차 유해에 대해서는 DNA 시료 채취조차 하지 않고 감식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매칭작업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유해의 피아 식별에 대해서는 당시의 전투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투기록과 유품 또 증언 등의 정황이 명백한 유해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아판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피아판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權垠希 議員 그러니까 말을 생략하지 마시고요, DNA 감식은 없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금년부터……

○權垠希 議員 그리고 DNA 감식은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유품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전투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군과 적군 추정 유품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심각하게도 유해발굴감식단은 유해를 발굴한 이후에 감시해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현장 상황을 작성을 합니다. 이를 원본자료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중국에 송환된 자료를 보면 이 원본자료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 유품들에 대해서 조작을

하여 중국에 유해를 송환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본자료는 최초에 저희들이 발굴했을 때의 자료이고 중국 송환자료는 이후에 중국 송환을 하면서 가공된 자료입니다. 원본자료와 중국 송환자료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9.7%, 불과 10%도 되지 않습니다. 아군으로 추정될 수 있는 유품자료를 삭제해 버리고 자료를 작성한 사례는 360구에 달합니다. 전체 대비 71.3%이지요. 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에 없었던 적군 유품이 새롭게 자료에 등장합니다. 126구, 무려 25%에 해당합니다.

총리님,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원본자료에 가공을 해서 유품을 고의로 포함시키거나 제거시켜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아시기는 누가 그걸 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權垠希 議員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받은 자료를 전수조사를 했고,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원본자료를 만들었고 송환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DNA 검사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權垠希 議員 잘못 보고를 받으셨고 보고받았던 내용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납득을 하시겠네요.

첫 번째 사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철원군 자등리 광덕산 현장입니다. 발굴한 유해의 유품이 당초에는 아군 유품 1점, 적군 유품 1점이었는데 중국에 송환하는 과정에서 아군 유품 1점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DNA 감식은 물론 없었고요, 아군 유품은 삭제하고 그리고 중공군이라고 유해가 중국에 송환돼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송내동 칠봉산에서 발굴한 유해입니다. 유품은 당시에 26점의 아군 유품과 기타 유품 1점이 발굴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송환할 때 송환자료에 우리 아군 유품 전체 기록이 삭제돼 버립니다. 그리고 없었던 적군 유품인 TT탄 8점과 TT탄피 3점, 총 11점이 새롭게 생겨나 버립니다.

총리,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드린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서도 보고가 잘못됐다는 제 말이 납득이 안 가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송환했다고 하는 사체는 중국 사체들이고, 그것을 송환하기 위해서 유해발굴감식단이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기록이나 유품 또 증언 등을 토대로 해서 1차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權垠希 議員 총리님, 그 얘기는 시작하기 전에 하실 얘기였고요, 지금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權垠希 議員 자료에 저렇게, 유품에 손을 댄 자료를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權垠希 議員 확인하시고 조사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해발굴감식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아판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權垠希 議員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거시들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垠希 議員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이젠 판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판정을 할 수 있는 기록에 손을 댔다는 것 아닙니까. 원본 기록에 손을 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으로 보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權垠希 議員 지금 그 결과, 이 자료에 따르면,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송환한 505구의 유해에 대해서 100% 중공군이라고 확신하

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총리님,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유해가 이렇게 행정 편의, 행정 무능으로 무분별하게 분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국으로 송환된 유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군 유품 제거에 대한 내부지시 문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아군 유품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셔야 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자료를 좀 주시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垠希 議員 총리님, 유해발굴감식단의 부대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건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權垠希 議員 ‘그들을 조국 품으로’입니다.

하지만 무능한 정부가 무능한 행정으로 조국 품에 있어야 할 그들을 타국 품으로 보내 버렸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FX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 방사청을 대상으로 민정수석실이 하고 있는데요. 왜 외교안보수석 쪽에서 하지 않고, 외교 안보 라인에서 하지 않고 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관해서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權垠希 議員 그렇습니까?

이 FX 사업은 단순한 기술이전을 숨겼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FX 기종 선정과 관련돼서부터 쭉 잘못이 있어 왔다, 문제가 있어 왔다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기종 선정의 결정권자는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석연치 않게 F-15에서 F-35로 기종이 변경된 것 역시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F-35로 결정을, 기종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에게 핵심기술이 이전될 것처럼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사실은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언론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불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국방부차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에게 속이거나 잘못, 거짓을 얘기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아까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범죄의 단서가 있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은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상을 알아보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국가안보 차원의……

아까 보고에 의하면 지금 그 문제된 이 사업들은 다 처음부터 공개되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다 사전에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 온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垠希 議員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마찬가지로 정확한 보고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보고되지 않은 것에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과연 언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핵심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보고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한 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權垠希 議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권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議員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과 또 전 국민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는 박정희를 포용하고 우리 사회의 보수는 김대중을 포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갔으면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두 분 다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 영웅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영웅입니다. 중국의 등소평이나 싱가포르 리콴유의 반열에 드는 전근대적 사회를 근대적 사회로 완전히 변모시킨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영웅입니다.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또 IMF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일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남북관계의 새로운 문을 연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의 결과 우리 국민의 개성과 창의성은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근대화의 기반이 없이는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또 민주주의 없이 근대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싸우는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보는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보수는 김대중 대통령을 여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태적인 시대 인식 그리고 이 정치적인 모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만 극복이 되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의 많은 부분들이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님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다른 질문, 사이버 테러 질문 먼저 하려 그랬는데 맥락상 국사 교과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말입니다, 현대사 부분은 굉장히 챕터가 적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냥 단순 소개하는 정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근현대사 교과서가 별권으로 생겨나고 근현대사 부분이 전체 역사에서 50%, 60%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특히 검정으로 바뀌면서 집필자의 견해에 따라서 그런 설명의 비중도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국사 교과서 논란의 본질은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의 문제지요. 기존의 교과서가, 기존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 왜곡이 많다 이런 내용의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내용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게 하자 하는 것이 이번 취지입니다.

○河泰慶 議員 그 말은 검정 교과서도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국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검토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河泰慶 議員 그렇지요? 아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검정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6년 전에 그런 개편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왜곡과 편파성 시비가 생겼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가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河泰慶 議員 그런데 그 논란의 거의 90% 이상은 근현대사 부분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河泰慶 議員 근현대사 중에서도 해방 이후의……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근현대사……

○河泰慶 議員 그렇지요, 해방 이후의 문제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해방……

○河泰慶 議員 일제 시대 때도 거의 논란이 없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해방 이전의 문제에 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근 100년 이후의 문제들을, 그래서 근현대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거기에서 주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글쎄요, 제가 살펴보니까 2015년이니까 한 45년 따지면 한 70년 되겠네요. 거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이전에는 지엽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닐 때는 현대사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언론에도 났는데 특히 해방 이후의 역사는 아직 진행되는 당대의 역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더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더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훨씬 더 합니다.

이것을, 현재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교과서에 기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아직도,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인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고 각 정권마다 피해자, 이해관계자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이 국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대사 부분, 특히 해방 이후 부분이, 상당 부분 논란이 되는 부분이 교과서에서 빠진다면 논란이 될 부분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사, 중세사까지는 논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현대사를 별도의 책으로 만들어 내고 근현대사를 오륙십 %로 비중을 높인 것 자체가 실패한 것이다,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사 교과서는 현대사 비중을—과거에는 10% 이하였습니다—10% 이하로 대폭 줄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현명한 방법이고, 그랬을 때는 만약에 국사 교과서 논란이 없다면 국정, 검정, 이렇게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체제보다도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연구 끝에 결국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河泰慶 議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리께서 균형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 어렵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사 교과서 문제로 시간이 오래 끌어지고 해법이 안 나온다면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모두 국민들한테 외면 받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리님 나오신 김에 사이버 테러 문제 여쭤 보겠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받은 물질적 피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사실은 범죄가 되거나 또는 사건이 된 경우에, 민·형사상의 사건이 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사건이 안 되는 암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공식적인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제가 정부한테 받은 자료는 아까 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지금 1조 100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더 심해지고 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 업무망이 북한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최소 6개월 이상 북한이 서울메트로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철도공사 내부 전산망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외부 공격에 뚫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융기관, 방송국, 원자력발전소, 점점 공격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민국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들의 보안 의식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실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인데, 우리 사이버망을 보안망, 외부망과 차단된 이런 차단망으로 구성을 해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된 부분들이 지금 사이버 테러에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경우……

○河泰慶 議員 북한의 사이버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한 응징이 계속된다면 북한 도발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議員 잠깐 통일부장관 나오시지요.

방금 우리 총리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사이버 도발 의지를 꺾는 데 우리의 효과적인 응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통일부에서 효과적인 응징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이버 테러 문제에 대한 대응은 통일부에서 준비하기보다는 국방부 차원에서 주관을 하고……

○河泰慶 議員 국무위원이시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따로 어떤 사이버 대응 차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응징 방안은 뭐가 있냐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사이버 전문가들과 그런 쪽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국방부 나오세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징 방안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징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이버에 방어 기능과 공격 기능이 있다면 응징,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도발하려는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교리와 또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용어를 써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응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河泰慶 議員 할 말이 없겠지요.

우리 총리님, 다시 나오십시오.

잠깐만요, 국방부 잠깐만.

사이버 전쟁에 대한 교전 수칙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사이버전에 대해서 교리는 각국이 개발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군도 사이버전에 대해서 있습니다.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독트린을,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총리님 나오시지요.

목함지뢰 사고가 있었을 때 확성기 방송이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북한은 확성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테러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응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응징방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대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사이드 게임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해 왔고 전혀 공격을, 우리는 보복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우리에게 가했을 때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은 공공시스템에 대해서 보안망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국가의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런 보안망이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중에 일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망을 분리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응징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충분한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 자원들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가 사이버대응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런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또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총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스럽긴 한데, 지금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이버 세계는 하루에 수백 개씩 새로운 악성코드가 나옵니다. 방어에만 치중하다가는 계속해서 당하기만 합니다. 도발 의지를 꺾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당했을 때 그리고 북한이 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 즉각적인 반격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는 인터넷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도 사이버로 반

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목함지뢰 반격이 확성기라는 형태로 나타나듯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핸드폰이 지금 한 400만대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 TV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가했을 때 우리는 북한이 다 보게, 한국 드라마를 틀어 주면 북한 주민들이 다 보게, 오히려 북한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각 부처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외교부 나오세요.

국제적인 사이버전 교전수칙인 탈린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아시는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네.

탈린 매뉴얼에 사이버 공격에는 사이버 보복뿐 아니라 비사이버 보복도 허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북한 같은 특수한 경우 때문에.

그러면 사이버 테러를 방어하는 국제적인 협약인 부다페스트협약은 아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것은 알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河泰慶 議員 부다페스트협약에 한국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부다페스트협약은 지난 2011년에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한국도 관계부처 간에 그 협약 가입의 실익과 또 가입하기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국내법을 고친다든지 하는 과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렇지요. 국내법을 고쳐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국내법을 고칠 필요가 아마 있을 겁니다.

○河泰慶 議員 지금 미국 일본 호주, 47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사이버 테러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 통신시설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통신사 감청영장 발부할 경우에 통신사가 협조할 의무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이 우리나라에게 협조 요청을 해도 우리가 협조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입을 못 하는 것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가입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한다기보다는 가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이버 공격 내지는 사이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원천이 있을 텐데 그 원천들이 같은 협약에 가입해 있어야 저희가 부다페스트협약에 가입하는 실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가입해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익 문제하고 우리 국내 입법 보완, 두 가지가 다 조금 더 관계부처 간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河泰慶 議員 외교부도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말씀을 하시는 건데 중국은 가입 안 해 있고 다른 나라는 많이 가입, 47개국이 가입해 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그렇습니다.

○河泰慶 議員 북한이 중국 망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망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인 겁니다. 여기에는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그러니까 TPP도 가입해야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그렇습니다.

○河泰慶 議員 중국과 FTA도 해야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그렇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河泰慶 議員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외교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河泰慶 議員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입할 자격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외교부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지금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일곱 나라랑 하고 있고 다자적인

노력에도 되도록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제가 중국 고위 간부를 만났을 때 중국한테 '우리가 사이버 테러 당하면 북한 애들이 중국 영토에서 저지르는 것이니까 중국 너희들이 협조를 줘야 된다'라고 여러 번 촉구한 적이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사이버 테러 수사하는 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그 부분은 사실 외교부보다는 법 집행기관 쪽에서 협의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책 부분은 외교부가 맡아서 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河泰慶 議員 그러면 법무부장관 역임하셨던 총리님 다시 나오시지요.

중국하고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 수사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중 간에 사법 공조는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에 관해서 협의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케이스마다, 영역을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마다 협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 범죄들에 대해서도 공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조를 하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피차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러면 중국과 협력해서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사이버 테러리스트를 확인하고 추방시키거나 이런 사례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범죄 단서가 있으면 우리 수사 당국에서 추적하는 노력을 하고 또 공식 사법 공조는 아니라도 양국 간에 MOU 체결을 통해서 사실상 협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집계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러면 중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 사이버 테러 아지트를 한국이 확인하고 중국에 협조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河泰慶 議員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방부차관님 나와 주시지요.

북한 핵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께 드렸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과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위협 수준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 정도는 북한 핵에 의한 심리적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은 원자로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안전, 세이프티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많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議員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원자력발전소가 터졌을 때의 피해 정도와 핵무기가 터졌을 때의 피해 정도가 어느 게 더 큽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핵무기도 여러 가지 종류와 터진 위치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르고요, 원자력발전소도 발전소가 외부 공격에 의해서 터졌을 때하고 또 내부에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핵무기 자체가 인명을 살상하려는 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무기에 의한 공격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議員 작년 제가 질의 때 확인한 것은, 원자력발전소들은 어쨌든 원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매뉴얼과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는, 작년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핵이 떨어질 것을 전제한 대비책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말고는 지금 다른 생각이 없다, 이게 답변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시스템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핵에 의한 피해를 강구할 수 있다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전발전소 주위의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아니,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핵이 떨어질 것에 대한, 핵이 원전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원전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라 북한 핵이 떨어질 경우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비책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게 작년 답변이었는데 올해도 똑같냐고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갖고 있는 킬체인과 KAMD가 바로 그 핵에 대한 대비책인데 킬체인이나 KAMD가 우리 지역에, 우리 시설에 떨어지기 이전에 핵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의 요체이기 때문에 작전지역으로 다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거는 차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사일 수십 발에 어디에 핵무기가 장착돼 있는지 식별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의원님, 저희들은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우리 군사적인 요체인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河泰慶 議員 그러면 핵무기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걸 전제로, 그러면 작년 답변이랑 똑같네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아닙니다. 확률의 문제인데, 일단은 핵무기를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술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징후가 포착됐을 때 군사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킬체인이고 또 발사했을 때 그것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이 KAMD입니다. 그것이 다 실패했을 때 떨어지는 방호시설을 갖추고, 이 세 가지를 다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러면 떨어졌을 때 방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작년 답변이.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국가 주요 핵심시설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다 지금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핵심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방호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민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군사적 시설에서만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호시설 갖추는 데 있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러면 민간에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민간에 해 나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군사체계를 갖추는 것, 우리가 2020년대 중반까지 갖추겠다는 게 국민이 기대하는 군사적으로 원하는 수준, 2020년 중반까지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 것이 민간에 대한, 국토 전체에 대한 방호체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웃음)

○국방부차관 백승주 아니, 그것 때문에 저희들……

○河泰慶 議員 답변을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아무리 제가 여당 의원이지만 너무하시잖아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아니, 너무하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河泰慶 議員 바보 호구로 압니까, 지금?

민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또 똑같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우리 국방 차원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민간이든 국토에 안 떨어지도록 하는 군사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고 또 방호체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갖추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河泰慶 議員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핵은 떨어지면 그냥 다 죽는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답변이 깊이 고민 안 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핵의 전술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북한에 핵배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이번에 행사에서 핵배낭 문제를 보여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핵의 소형화 문제하고, 소형 핵무기하고는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핵의 소형화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무게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소형화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표준연구 결과 다양한 형태의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지뢰라든지 핵배낭 이런 부분을 북한이 갖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여주었던 부분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핵배낭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또 소형 핵무기에 대한 주장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술적 사용 가능성, 보유 가능성……

○河泰慶 議員 방금 북한이 핵배낭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런 부분은 아직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 스스로 그런 것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러면 전술을 짤 때 핵배낭 사용 경우도 가정하고 짜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우리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또 체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한 사실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또 핵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방 차원에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또 우리 국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소련이 해체될 때 핵배낭 50개가 분실되었고 그 일부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설을 들어 본 적 있으세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소련의 여러 가지 핵 관련 과학자들이 유출되고 배낭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많이 소련 밖으로, 구 소련 밖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러면 소련 과학자가 북한에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외부 전문가들이 그런 주장을 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河泰慶 議員 들어가시지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텐데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정의화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 의원(26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83인)

강은희 강창희 권성동 길정우
김동완 김민기 김상훈 김성곤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제남
김춘진 김한표 나성린 류성걸
민병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호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신동우
신문식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양승조 여상규 원유철 유대운
유승민 윤재옥 은수미 이노근
이미경 이병석 이에리사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장우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진복 이학영
이헌승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조명철
주호영 천정배 최동익 최봉홍
한정애 홍문종 홍일표

○속개 시 재석 의원(67인)

경대수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기식 김동완 김민기 김세연
김영환 김우남 김정록 김춘진
김한표 김현미 문정림 박대동
박맹우 박성호 배덕광 백군기
부좌현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민 심재권
안상수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우윤근 유대운 유성엽
윤명희 이상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우현 이원욱 이장우 이재영
이종배 이종진 이주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임내현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정병국 정청래
조명철 조원진 최봉홍 최재천
한선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57인)

강길부 경대수 權垠希 김광림
김민기 김세연 김용남 김을동
김종태 김춘진 김한표 김 현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박명재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홍근 백군기 부좌현
서영교 손인춘 송영근 신문식
안상수 양승조 염동열 원유철
유승민 유의동 이강후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인영 이종걸
이종배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 한 성　이 헌 승　임 수 경　장 정 은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의 화
조 원 진　진 선 미　최 봉 홍　하 태 경
황 인 자

○청가 의원(15인)

강 동 원　김 도 읍　김 희 국　김 희 정
문 재 인　송 광 호　유 기 준　유 일 호
윤 상 현　이 만 우　이 목 희　정 미 경
주 영 순　최 경 환　황 우 여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형 준
입 법 차 장	구 기 성
의 사 국 장	장 대 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황 교 안
통 일 부 장 관	홍 용 표

○출석 정부위원

외교부제1차관	조 태 용
통 일 부 차 관	황 부 기
국 방 부 차 관	백 승 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김태현)선출에 관한인사청문특별	진 영	새누리당	2015. 10. 13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김태현)선출에 관한인사청문특별	강기윤	새누리당	2015. 10. 13
	정청래	새정치 민주연합	

○의안 제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주승용·김영환·김영록·이찬열·변재일·최규성·이개호·김성곤·이윤석·신정훈·김승남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신상진·이노근·박성호·이학재·이헌승·하태경·함진규·강석호·김을동·심재철·이종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주승용·김영환·김영록·이찬열·강창일·변재일·최규성·이개호·김성곤·이윤석·신정훈·김승남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이개호·조정식·유승희·강기정·김관영·김승남·진선미·부좌현·김동철·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 10. 13 정부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신상진·김상훈·이한성·김을동·송영근·안상수·정미경·박상은·이학재·함진규·강석호·김태원 의원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신상진·이노근·박성호·이학재·이헌승·하태경·함진규·강석호·김태원·김을동·이종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황주홍·김성곤·이개호·김춘진·유성엽·박민수·이찬열·백재현·정용기·강창일 의원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6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2015. 10. 13 정부 제출)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이강후·정수성·양창영·이노근·서상기·홍지만·정문헌·김동완·박명재·이정현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최봉홍·정희수·양창영·송영근·박창식·정갑윤·신경림·정병국·김세연·신성범·박대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주승용·김영환·김영록·이찬열·강창일·변재일·최규성·이개호·김성곤·

이윤석·신정훈·김승남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신상진·이노근·이학재·이헌승·하태경·함진규·강석호·김태원·김을동·이종진·나성린 의원 발의)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최봉홍·정희수·양창영·송영근·박창식·정갑윤·신경림·정용기·정병국·신성범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김태원·박덕흠·이노근·이장우·이헌승·하태경·함진규·강석호·박성호·강기윤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주승용·김영환·김영록·이찬열·변재일·최규성·이개호·김성곤·이윤석·신정훈·김승남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신상진·안상수·이노근·정미경·이한성·박상은·김을동·이종진·박성호·이학재·이헌승·하태경·함진규·강석호·김태원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박덕흠·김태원·이노근·이장우·이헌승·함진규·박성호·이학재·김성태·신상진·이우현 의원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최봉홍·정희수·양창영·송영근·박창식·정갑윤·신경림·정병국·김세연·박대동 의원 발의)

이상 6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이원욱·홍익표·김기준·원혜영·양승조·이미경·임수경·박홍근·정호준·부좌현·민병두 의원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철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8. 27 주승용·강창일·변재일·이윤석·이개호·김영록·최규성·김성곤·김관영·신정훈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5. 10. 8 김태원·박덕흠·이노근·이장우·이헌승·하태경·함진규·강석호·박성호·강기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3일 발의자 철회 요구

○보고서 제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우리 부대 활동보고

(2015. 10. 13 정부 제출)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하겠음